
2019년도 원주시·원주소방서에 대한
강 원 도 정 기 종 합 감 사



강 원 도
(감 사 위 원 회)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액 (천 원)	
			계 : 24건	계 24 시정 15 주의 7 통보 2	계 추징 회수 감액	706,127 115,522 12,377 578,228	계 ** 훈 계 **
1	♣과	'10~'19	인사운영 등 부적정	시정			-
2	♠과 등 10개 부서	'14~'19	소송비용 회수 소홀	시정			-
3	♣과	'17~'19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훈 계 *
4	⊙과	'16~'19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시정	회수	2,887	훈 계 *
5	◆과	'16~'18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업무 소홀	주의			훈 계 *
6	▣과	'17~'19	지역역량강화사업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훈 계 *
7	●과	'16~'19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소홀	주의			-
8	●과, ♣과	'16~'19	신분 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9,200	훈 계 *
9	●과	'16~'19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및 변상금 징수 소홀	시정			훈 계 *
10	▤과	'18~'19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통보 (모범사례)			-
11	♥과	'16~'19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시정	추징	62,308	-
12	♥과	'16~'18	지방세 취득세 등 감면분 부과누락	시정	추징	35,305	-
13	●소	'16~'18	차량 종류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시정	추징	21,909	훈 계 *
14	▢과	'16~'18	수입금(참가비)이 있는 보조사업 수입금 미정산	시정			훈 계 *
15	▤과, ⊕과	'16~'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철거	통보 (모범사례)			-
16	\$과	'18~'19	도로공사 감독업무 소홀	시정	감액	268,225	

연번 (쪽)	소 관	시행 연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내역	금액 (천 원)	
17	&과	'15~'19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독업무 소홀	시정	감액	119,454	-
18	◇과	'15~'19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감액	129,810	훈 계 *
19	@원 #관	'14~'19	#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훈 계 *
20	◎과	'18~'19	노인복지관 ㄹㄹ분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주의			훈 계 *
21	\$과	'16~'18	서부순환도로(ㄹㄹ-㉠㉠) 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시정	감액	60,739	-
22	원주소방서 (♠과)	'18	징계처분자 경력평정 오류 및 소방위 이하 전문능력 평정 부적정	주의			훈 계 *
23	원주소방서 (♠과)	'16~'19	현장 활동 구조장비 운용 부적정	시정			-
24	원주소방서 (♠과)	'16~'18	의용소방대 교육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90	-

[일련번호: 1]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인사운영 등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가점 적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으며,

가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지방공무원 평정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자격증,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원주시 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에 따르면 ‘사회복지직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직렬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자격증 특채로 채용된 ※※5급 S와 사회복지직렬 및 ㉠㉠직렬 채용 시 자격증 제한으로 채용된 ※※7급 T 등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가산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한 결과 2019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2019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 변경 명세

직급	성명	당초					변경	비고
		총 평정점수	근무 성적	경력	실적 가산점	가산점 (자격증)	총 평정점수	
※※5급	S (☉과)	96.93	67.99	28.60	0.09	0.25	96.68	자격증 특채
※※6급	U (○○동)	82.60	52.90	29.08	0.12	0.5	82.10	"
※※6급	V (☉과)	99.07	68.30	30.00	0.27	0.5	98.57	"
※※7급	T (☒☒면)	84.58	54.45	29.60	0.03	0.5	84.08	자격증 제한
※※8급	W (☐☐동)	71.10	47.10	23.50	0.00	0.5	70.60	"
※※8급	X (■□동)	75.73	48.90	26.32	0.01	0.5	75.23	"
※※8급	Y (○○동)	74.65	44.90	28.90	0.10	0.75 (외국어 포함)	74.15	"
※※8급	Z (△과)	93.51	63.95	28.90	0.16	0.5	93.01	"
※※9급	AA (△과)	54.62	43.30	10.81	0.01	0.5	54.12	"
☐☐6급	AB (▲과)	100.61	69.98	30.00	0.13	0.5	100.11	"

2. 직렬불부합 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부서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과 직렬별 정원을, 「원주시 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위·직급·직렬에 부합되도록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정원에 행정6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 ○○담당 직위에 ※※6급 AC를 임용하는 등 5개 직렬 11명에 대하여 직렬에 맞지 않는 직원을 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담당급 이상 직렬불부합 임용 현황

소속	직위	정원		임용사항			
		직렬	직급	임용일	직렬	직급	성명
■과	담당	행정	6급	2018.07.05.	사회복지	6급	AC
☉과	담당	행정	6급	2016.07.18.	사회복지	6급	AD
▲과	담당	세무	6급	2018.07.05.	행정	6급	AE
▢과	담당	시설	6급	2018.07.05.	행정	6급	AF
▣과	담당	행정	6급	2017.07.01.	전산	6급	AG
◇과	담당	보건·환경·시설	6급	2019.01.14.	기계	6급	AH
◆ 도서관	담당	사서	6급	2019.01.14.	행정	6급	AI
▤면	담당	행정	6급	2018.07.05.	세무	6급	AJ
▥면	담당	행정	6급	2018.07.05.	세무	6급	AK
㉠동	담당	행정	6급	2018.09.11.	세무	6급	AL
◆ 동	담당	행정·사회복지	6급	2019.01.14.	세무	6급	AM

3. 실무수습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미준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IV. 실무수습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

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실무수습 발령은 공문으로 하며, 실무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공무원 임용일 전일까지이고, 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임용권자는 실무수습직원에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1년 이상 재직한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되거나, 실무수습의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실무수습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실무수습직원으로 재직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2015. 9. 8.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1년 이상 실무수습직원으로 재직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9급 AN 등 4명에게 7월에서 9월이 경과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른 퇴직금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실무수습직원 1년 이상 재직자 및 퇴직금 지급 현황

1)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 채 합격일	성명(직급)	수습기간	임용일	발령부서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지연일수	비고
소 계	4명						
2015. 9. 8.	AN(♣♣9)	2015.10. 8. ~2016.12.31.	2017. 1. 1.	☒면	2017.10.23.	295일	지연이자 미지급
2015. 9. 8.	AP(♣♣9)	2015.10. 8. ~2016.12.31.	2017. 1. 1.	㉠동	2017.10.23.	295일	지연이자 미지급
2015. 9. 8.	AQ(♣♣9)	2015.10. 8. ~2016.12.31.	2017. 1. 1.	☐동	2017.10.23.	295일	지연이자 미지급
2015. 9. 8.	AR(♣♣9)	2016. 1. 5. ~2017. 2.28.	2017. 3. 1.	㉠동	2017.10.23.	237일	지연이자 미지급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1년 이상 실무수습직원으로 재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고,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위 4명에 대하여는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직렬에 임용된 경우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인사발령 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및 직렬별 정원에 부합되도록 임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원주시에서는 「행정소송법」,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²⁾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 규칙」 제46조, 제64조에 따르면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하고,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금 등의 추심,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

2) 소송비용이란 승소사건과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결정된 비용으로서 「민사소송비용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인지액, 서기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법관등의 일당·여비, 감정·통역·번역·측량에 관한 요금, 통신비, 공고비, 변호사비용 등이 해당됨

수,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82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법제처 법령해설례(13-0472, 2013.10.25.,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채권의 권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6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르면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의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 소송주관부서에서는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고지 및 징수하고, 채무자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³⁾ 도래 전에 [표 1]과 같이 소송비용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1]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절차

구 분	추진 내용
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 송달
2. 납부고지	-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납부고지

3) 소멸시효의 기산점(서울고등법원 2002.10.7. 자 2002라450 결정) :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

구 분	추 진 내 용
3. 독촉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 - 독촉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4. 강제이행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집행 조치 필요
4-1. 집행문 부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집행권원(판결서, 결정문,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에 집행문 부여 요청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에 신청
4-2. 재산명시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 *채무자가 본인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함
4-3. 재산조회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신청(재산명시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해 줌
4-4. 채권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재산에 압류 *추심명령 신청 또는 부동산 경매 신청 등
5. 채권 징수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촉을 하여도 완전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휴지하여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재산 가액이 강제집행할 금액보다 적을 때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재산가액이 강제집행할 금액보다 적을 때
6. 채권의 소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 채무자가 사망하고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런데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원주시가 승소로 확정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의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주시(○과, □과, ♠과,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누×××××) 사건의 경우 2011. 10. 31.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되었음에도 3여년이 지난 2014. 10. 27. 납부고지를 하는 등 총 10건 33,970천 원의 소송비용 부과 납부안내를 지연하였으며,

[표 2] 승소사건 소송비용 납부안내 지연 현황

(단위: 원)

사건번호	주관부서	소송비용 확정액 (확정일)	부과(납부) 안내여부	미납액	강제집행절차 이행여부
계		33,970,171		32,687,811	
(1심)춘천지방법원2008구합××× (2심)서울고등법원2008누×××××	○과	1,520,126 (‘11.10.31.)	○ (‘14.10.27.)	1,520,126	재산명시
(1심)춘천지방법원2008구합×××× (2심)서울고등법원2009누××××× (3심)대법원2010두××××	○과	10,510,090 (‘10.12.16.)	○ (‘14.10.27.)	10,510,090	재산명시
춘천지방법원(원주)2010카합×××	○과	761,143 (‘11.11.4.)	○ (‘14.10.27.)	761,143	재산명시
(1심)춘천지방법원2009구합××××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	○과	3,019,132 (‘11.9.27.)	○ (‘14.10.27.)	3,019,132	재산명시
(1심)춘천지방법원2011구합××××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	□과	1,522,420 (‘12.9.18.)	○ (‘17.4.27.) (‘17.8.24.) (‘18.4.30.)	1,522,420	재산명시
춘천지방법원2013구합××	□과	1,533,500 (‘13.11.25.)	○ (‘17.4.27.) (‘17.8.24.) (‘18.4.30.)	1,522,420	재산명시 재산조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	□과	1,606,920 (‘14.10.23.)	○ (‘17.4.27.) (‘17.8.24.) (‘18.4.30.)	535,640	재산명시
(1심)춘천지방법원2013구합××××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 (3심)대법원2014두×××××	♠과	3,009,110 (‘15.3.9.)	○ (‘17.4.28.) (‘17.8.25.) (‘17.12.1.) (‘18.10.19.) (‘18.12.26.) (‘19.4.23.)	3,009,110	재산명시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2가단××××× (2심)춘천지방법원2013나××××	♠과	3,962,595 (‘14.4.9.)	○ (‘17.4.28.) (‘17.8.25.) (‘17.12.01.) (‘18.10.19.) (‘18.12.26.) (‘19.4.23.)	3,962,595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2014구합××××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 (3심)대법원2015두×××××	♦과	6,525,135 (‘17.3.15.)	○ (‘18.8.22.) (‘18.11.14.) (‘19.3.15.)	6,325,135	재산명시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원주시(♠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표 3] ‘소송비용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미이행 현황’ 과 같이 13건 34,876천 원에 대하여 소송비용 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앞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멸할 우려가 있다.

[표 3] 소송비용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미이행 현황

(단위: 원)

사건번호	사 건 명	주관부서	소송비용 확정액 (확정일)	부과(납부) 안내여부	미납액	강제집행절차 이행여부
계	13건		39,125,023		34,876,391	
춘천지방법원(원주)2015카합xxxx	건물등 인도 단행 가처분	\$과	583,497 (‘16.5.23.)	○ (‘16.6.2.) (‘16.9.20.)	583,497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3가소xxxxxx (2심)춘천지방법원2014나xxxx (3심)대법원2015다xxxxxx	부당이득금	▣과	915,486 (‘16.5.24.)	○ (‘16.7.7.)	915,486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1가합xxxx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1나xxxx (3심)대법원2012다xxxxxx	손해배상(기)	☆과	1,404,762 (‘16.6.24.)	○ (‘16.7.7.) (‘16.9.20.)	468,250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3가단xxxxxx (2심)춘천지방법원2014나xxxx	손해배상(기)	◎과	6,624,200 (‘16.10.6.)	○ (‘16.11.7.)	3,312,100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1가합xxxx (2심)서울고등법원(춘천)2013나xxxx (3심)대법원2013다xxxxxx	추심금	▢과	9,913,090 (‘16.10.6.)	○ (‘16.11.3.) (‘17.8.24.) (18.4.30.)	9,913,090	미이행
춘천지방법원2013구합xxxx	골재선별·파쇄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	\$과	1,515,220 (‘15.4.13.)	○ (‘17.3.22.)	1,515,200	미이행
서울고등법원2014재나xxxxxx	손해배상(기)	\$과	3,319,750 (‘16.11.4.)	○ (‘16.12.7.) (‘18.4.24.) (‘18.11.14.)	3,319,750	미이행
춘천지방법원2015구합xxxx	손실보상금	\$과	3,312,830 (‘17.8.3.)	○ (‘17.9.5.)	3,312,830	미이행
(1심)춘천지방법원(원주)2015가단xxxxxx (2심)춘천지방법원2016나xxxxxx	채무부존재확인	♣과	380,380 (‘17.8.31.)	○ (‘17.9.21.) (‘18.1.9.)	380,380	미이행
춘천지방법원(원주)2017가단xxxxxx	손해배상금	△과	3,310,838 (‘18.1.16.)	○ (‘18.2.1.) (‘18.2.27.)	3,310,838	미이행
(1심)서울행정법원(원주)2016구합xxxxxx (2심)서울고등법원2016누xxxxxx (3심)대법원2017두xxxxxx	보상금	\$과	901,100 (‘18.3.22.)	○ (‘18.5.1.) (‘18.11.14.)	901,100	미이행
서울고등법원2016재나xxxxxx	손해배상(기)	\$과	3,310,630 (‘18.2.22.)	○ (‘18.4.2.) (‘18.4.24.) (‘18.11.14.)	3,310,630	미이행
춘천지방법원(원주)2016가단xxxxxx	토지인도	\$과	3,633,240 (‘18.4.20.)	○ (‘19.5.28.)	3,633,240	미이행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원주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추심절차를 소홀히 하여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소멸된 때에는 관련자 문책 및 변상명령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강 원 도 징계·주의 요구

제 목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 과장	지방ⓧⓧ	AT
	② 원주시 □과(전 ♣과)	지방★★	AU
	③ 원주시 ♣과	지방★★	AS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운수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⁴⁾

[표 1] (주)ⓐⓑ운수 대규모점포(쇼핑센터) 개설등록 신청 현황

구 분			1차 민원(2017.12.29.)	2차 민원(2018.8.17.)
신청 내용	영업장	면적	14,556.25㎡	44,670.22㎡
		규모	지상 2~4층, 6층	지하 3층, 지상10층
	매장면적		판매 12,877.51㎡, 용역제공 523.65㎡	판매 14,583.55㎡, 용역제공 27,238.88㎡
	운영방식		임대 13,411.16㎡	임대 41,822.43㎡

※ 원주시(♣과) 제출자료 재구성 / 세부추진경위 [별첨 1]

지방★★ AS은 2018. 7. 5.부터 현재까지, 지방★★ AU는 2017. 7. 1.부

4) 2017. 12. 29. (주)ⓐⓑ운수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8. 4. 26. 최종 반려한 바 있음

터 2018. 7. 4.까지 ☺☺담당으로 근무하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를 담당하거나 검토하였고, 지방⊗⊗ AT는 2018. 7. 1.부터 ♣과장의 직위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를 검토·결재하였다.

1. 반복적인 법률 검토 및 보완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가. 반복적인 법률 검토 의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반려처분 사유를 반영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신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2017. 12. 29. (주)⊙⊙운수의 민원신청(이하 “1차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18. 4. 11.까지 3회에 걸쳐 ⊙과 등 12개 부서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민원을 반려할 사유가 없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유⁵⁾로 2018. 4. 28. 반려하였고,

2018. 8. 17. 민원신청(이하 “2차 민원”이라 한다)은 2018. 4. 28. ♣과의 반려 사유를 수용하여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없음에도, [별첨 2]와 같이 2018. 8. 21.부터 2019. 4. 10.까지 법률 검토를 다

5) 하나의 건물에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면적 모두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여야 함

시 의회(3회)함으로써 민원처리를 지연하였다.

나. 민원과 직접 관련 없는 보완요구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민원의 경우 ①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②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③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⁶⁾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⁷⁾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결 및 필수 구비서류 누락 여부,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된 형식적 요건 적합 여부 등 외형적 심사로 처리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1차 민원, 2차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규모점

6)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7. 4. 10. 제정됨

7) 민원처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1)에 따르면 등록은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는 법정 민원에 해당하며,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 성격의 민원으로서 형식적 심사로 수리할 대상이고 재량의 여지가 없음(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5. 4.)

포 등록요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별첨 2]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고, (주)㉠㉡운수에서는 원주시(♣과)의 보완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음에도, 동일한 보완요구 사항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 요구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⁸⁾

2. 처리기간 연장 부적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되,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 사유 및 처리완료 예정일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민원처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후에는 민원인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음에도 민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였다.

그리고 2차 민원의 경우 2018. 8. 31. (주)㉠㉡운수에 보완요구를 하면서 2018. 9. 18.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을 반려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원주시(♣과)에서는 (주)㉠㉡운수 의사와 무관하게 2018. 9. 8. 민원의 보

8) 민원인은 대규모점포 개설 촉구 문서를 통하여 이러한 사유 등을 들어 원주시에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예고함(2019. 3. 25.)

완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8. 9. 27. (주)⊙⊙운수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상태이니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반려하겠다.” 고 통보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2018. 10. 19.까지 (주)⊙⊙운수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0. 23. (주)⊙⊙운수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법령해석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⁹⁾임에도 2018. 11. 23. 이를 사유로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운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8. 11. 23.과 2019. 4. 26. 두 차례에 걸쳐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통보¹⁰⁾하였다.

3. 대규모점포 개설 의견청취 및 개설신청 예고 업무처리 미이행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하며, 개설계획을 예고

9) 민원처리 법령 해설집(2017.3.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법령해석 기간의 경우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여야 함

10) 2018. 11. 23.과 2019. 4. 26. 처리기간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민원처리법을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음”으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법령 등에 따르면 상급기관의 법령해석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 “처리기한에서 제외되지 않음” 즉,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반대로 하여 통보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행정신뢰를 떨어뜨림

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 개설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회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하며,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2017. 12. 29. (주)⊙⊙운수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면서 2017. 12. 29. 최초 등록신청 시부터 2019. 5. 9. 반려 시까지 한 차례도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채, 대한상공회의소에 검토용역을 의뢰(2회)하였으며, 민원인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에 따른 개설계획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불명확한 반려처분 부적정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기간 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라 민원인이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민원인에게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1차 민원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면적 모두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여야 하며, 대상 건물 중 일부 층의 일부 면적의 특정용도 시설만 선별하여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어 등록처리 할 수 없음’으로 이유를 분명히 밝혀 반려통보¹¹⁾ 하였으나,

2차 민원의 경우에는 [표 3]과 같이 반려통보를 하였으며, 그 사유에 따르면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득해야 하나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허용용도변경은 불가하며, 신규 판매시설의 설치도 불가함을 사유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는 결과적으로 민원서류를 보완 요구한 후 민원인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반려’ 처분이 아닌 ‘불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② 불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1차 민원은 물론 2차 민원에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한 것이 되며, ③ 1차 민원의 반려처분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1차 민원과 2차 민원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였다.

11) 지방★★ AU는 임의진술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 법률검토 및 상권영향평가서 등에는 반려처분할 사유는 없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업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기에 반려하였다고 주장함

[표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반려 통보(2차 민원)

가. 당해 신청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등록 기준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준 요건과 절차 등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야 합니다.**

나. 현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본 건축물 내 판매시설(소매시장 및 상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자동차정류장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결정된 시설 일 뿐, 대규모점포로의 사용은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의 범주를 벗어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판매시설(상점)을 판매시설(소매시장)로 변경하는 사항과 판매시설(소매시장)을 판매시설(상점)로 변경하는 사항은 건축물 허용용도변경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나 이러한 절차 없이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경우 변경인가를 받은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준 요건 및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라.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2항 라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허용용도변경은 불가하며, 또한 신규 판매시설의 설치도 불가합니다.

※ 원주시(♣과) 전자문서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반복적인 법률 검토 및 민원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완요구 등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처리법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의무사항인 협의회 의견청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④ 보완요구 후 민원인이 보완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하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요구가 아닌 불허가 처분을 함으로써 반려와 불허가를 구분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및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	지방	◇◇	V
	② 원주시 ◎과	지방	◇◇	U
	③ 원주시 ◎과	지방	◇◇	AV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권리보장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지방◇◇ V은 2017. 7. 1.부터 2019. 5. 17.까지, 지방◇◇ U은 2019. 5. 20.부터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담당으로 장애인복지업무를 총괄하였고, 지방◇◇ AV은 2018. 9. 11.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 실무자로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부적정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4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¹²⁾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정요건,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¹³⁾)에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사업계획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해당)를 확인하여야 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사업계획(재정·시설·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의 타당성, 수행사업의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수행기관 지정서(별지 제11호의3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 및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¹⁴⁾을 수립하여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기준인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 공개하여야 하고,

12) 시책의 내용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돌봄, 휴식, 사례관리, 역량강화, 상담 지원 등

13)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는 처리기간(30일)이 정해진 법정민원 서식

14) 위탁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명칭 및 위탁근거,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범위·내용 및 타당성, 위탁기간 및 조건,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추진일정 및 방법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사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공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면서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접수도 하지 않았으며,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고, ③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나 미 실시 하였으며, ④ 위탁계획 수립 시 위탁기간(3년)과 심사항목, 배점기준 이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고 재공고도 하지 않았다.

[표 1]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개요

□ 위탁경과

- 위탁계획 수립 : 2019. 3. 8.
- 의회 동의 : 2019. 3. 29.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9. 4. 3.~4. 17. (15일간) * 신청서 접수 : 2019. 4. 17.
- 위탁 심의 : 2019. 5. 27.

※ 심사위원회 : 원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7명)으로 구성, 위원장 호선

-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 2019. 5. 29.

□ 위탁계약(공증일) : 2019. 6. 14.

- 위탁기간: 2019. 6. 1. ~ 2024. 5. 31.(5년)
※ 위탁계획 수립 당시 위탁기간 : 2019. 6. 1.~ 2022 5. 31.(3년)

□ 수탁자 : 사단법인 **연대 원주시지회(대표 AW)

□ 위탁대상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 전반 (사무위탁)

※ 위탁시설은 ☼☼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 위탁비용(2019년) : 167백만 원(인건비 127, 운영비 16, 사업비 24) / * 민간위탁금(307-05)

※ 위탁비용 :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장애인복지관 연간 평균 운영비 및 사업비

또한 원주시(☉과)에서는 위탁심사를 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 간 호선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심사기준은 내부평가(30점)로 법인·단체의 재정능력(15점), 기관 운영 적정성(15점)을 평가하고, 위원평가(70점)로 법인·단체의 운영능력(40점), 지역사회 공신력(10점), 법인·단체의 운영의지(20점)를 평가하도록 위탁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부심사 평가 결과 법인·단체의 재정능력 15점, 기관 운영 적정성 10점으로 평가하였으나, [표 2]와 같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가 없거나 증빙자료를 일부만 제출하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정 평가 점수인 내부평가 7점에 위원평가¹⁵⁾ 58점을 더하면 65점이 되어 70점 미만으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위탁기관으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였다.

[표 2]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심사 결과

심사항목	평가지표	배점	원주시 평가	적정 평가	제출 증빙자료
계		30	25	7	
소계		15	15	6	
법인단체의 재정능력(15점)	법인(단체)의 기본재산 현황 · 7천만원 이상(4) · 5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3)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 · 3천만원 미만(1)	4	4	3	기본재산액 (5천만원)
	법인(단체)의 부채 현황 · 5백만원 미만(4) · 5백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3) ·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 · 5천만원 이상(1)	4	4	0	증빙 일부 제출 (농협만 조회)
	법인(단체)의 회계감사 운영(자체감사 결과) · 지적사항 없음(4) · 지적사항 1~2회(3) · 지적사항 3회이상(1) · 실적없음(0)	4	4	0	증빙 없음 (감사보고서)
	수탁기간동안 재정부담액(자부담확약서) · 5백만원 이상(3) · 5백만원 미만~4백만원 이상(2) · 4백만원 미만~3백만원 이상(1) · 3백만원 미만(0)	3	3	3	자부담확약서 (5백만원)
소계		15	10	1	
법인단체의 기관운영 적정성(15점)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 (법정 인·허가 시설 및 기관) · 7개 이상(5) · 5~6개(3) · 3~4개(1) · 2개이하(0)	5	0	0	증빙 없음
	연 평균 사회복지관련 활동사업 참여 및 수탁 실적 · 5회(5) · 3~4회(3) · 1~2회(1) · 없음(0)	5	5	1	예산신청, 공모사업 선정 공문(2)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이사회 운영실적(연 단위) · 5회(5) · 3~4회(3) · 1~2회(1) · 없음(0)	5	5	0	시설 운영실적 없음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심사표 별첨

2. 장애인복지시설 예·결산 보고 및 공고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4조, 제45조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15) 위원평가 점수표

구분	평균점수	위원장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평가점수	58	63	57	58	59	50	62	56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3]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시설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예·결산서를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3] 장애인복지시설 시설 예·결산서 제출 및 공고 미이행 현황

(단위 : 건)

연도	시설명	시설 예산서				시설 결산서			
		지연제출	미제출	미공고		지연제출	미제출	미공고	
				시군	시설			시군	시설
계	갈거리사랑촌 외 18개소	32	1	1	6	3	-	1	1
2016		12	-	-	1	-	-	-	1
2017		8	-	-	-	1	-	-	-
2018		8	-	-	-	1	-	-	-
2019		4	1	1	5	1	-	1	-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3. 장애인복지시설 경력 인정 및 호봉 확정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 범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환산율을 적용하여 인정하고, 유사경력은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종사한 경력, 「정신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해 80%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4]와 같이 ☐☐소 종사자 AX이 「정신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센터에서 자살 예방사업 사례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력을 100% 인정하고 인정기간에 대해 호봉을 확정된 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현황

(단위 : 원)

시설명	대상자	경력인정사항				급여지급 내역 (2013. 10월~2019. 6월)	
		근무기관	근무기간	인정 기간	인정율 (%)	차액 (회수금액)	
☐☐소	AX (’89. 2. 7.)						2,887,280
		◆◆센터	2011. 4. 18. ~2011. 12. 31.	8월	100	경력인정 후 급여	102,681,470
						적정 급여	99,794,190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4.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29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및 「사

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고, 비지정후원금은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¹⁶⁾), 자산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5]와 같이 ☐☐소 외 8개소에서 비지정후원금을 운영위원회 회의비 및 기관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로 총 59건 14,230천 원을 집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5] 장애인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건, 원)

시설명	집행내역										
	계		2016		2017		2018		2019		예산 과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9	14,229,610	14	1,908,500	12	3,696,000	21	6,045,640	12	2,579,470	
‘ㄱ’	6	332,100	1	63,000	2	39,100	3	230,000	－	－	회의비
‘ㄴ’	4	785,000	－	－	2	255,000	2	530,000	－	－	회의비
‘ㄷ’	10	501,970	－	－	－	－	－	－	10	501,970	회의비, 기관운영비
‘ㄹ’	1	110,500	1	110,500	－	－	－	－	－	－	기관운영비
‘ㅁ’	8	7,202,480	－	－	4	3,221,900	3	3,180,580	1	800,000	기관운영비

16) 회의비 : 원칙적 사용불가(단, 15% 범위 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

‘ㄴ’	1	159,500	-	-	-	-	1	159,500	-	-	기관운영비
‘ㄷ’	3	2,699,260	-	-	-	-	2	1,421,760	1	1,277,500	기관운영비
‘ㄹ’	22	1,913,800	8	1,210,000	4	180,000	10	523,800	-	-	회의비, 기관운영비
‘ㄺ’	4	525,000	4	525,000	-	-	-	-	-	-	회의비, 기관운영비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장애인복지시설 회회소에서 경력 인정 및 호봉 획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지급된 급여 2,887천 원을 회수하고 ② 비지정후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예결산 보고 및 공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들의 업무 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전 ◆과) 지방□□ AY

② 원주시 △과(전 ◆과) 지방●● AZ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이하 “환경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주기

(단위 : 회/년)

구 분	인·허가여부	특정지역 ¹⁷⁾	기타지역
우수관리(위탁)	허가대상	2	1
	신고대상	1	1/2년
일반관리	허가대상	4	2
	신고대상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4	4
	신고대상	4	2

지방□□ AY은 2013. 7. 16.부터 2018. 1. 14.까지, 지방●● AZ는 2018. 1.

17) 특정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상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호소수질보전구역, 공원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청정지역

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환경통합지도·점검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공통사항으로 ①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사항과의 일치여부 ②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운영 실태(고장방치 등) ③ 오염물질 누출여부 ④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 여부 ⑤ 방지사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⑥ 자가측정이행 여부 ⑦ 행정처분 이행상태 ⑧ 환경책임보험 적합 가입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수질분야에서는 ①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확인 ②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배출시설과의 일치 여부 확인 ③ 일정기간 중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처리량(위탁처리량 등)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폐수처리량의 적정여부 확인 ④ 비밀 배출구 유무 확인 ⑤ 오염물질의 회석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에서도 ①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여부와 고장방치 ② 처리방식의 적정 여부 ③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 ④ 자가측정 이행 여부 ⑤ 위탁 적정여부 ⑥ 관리인 선임 및 상근여부 ⑦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시(◇과)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시설 중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이상¹⁸⁾으로서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시설, 폐수위탁계약시설 등에 대하여 기술관리인을 선임하고 근무하고 있

18)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 이상 시설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 공공처리시설

는지 여부와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수질검사 기록지를 확인하고, 최종 방류수 수질상태에 따라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 발생량에 따른 일정기간 동안 위탁회사에 위탁한 폐수량과 비교하여 무단 방류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축분뇨법 제48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기술관리인 선임과 자가측정시설이 점검 대상시설의 1.2%내외 임에도 지도·점검 시 기술관리인 선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가측정 수질검사 기록을 확인하여 기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환경통합지도·점검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도·점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수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고 있는지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하천오염의 원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민원발생 시에만 채수하여 확인하는 등 소극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2]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시설 점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시설	6	5	4
기술관리인 확인 ¹⁹⁾	-	-	-
자가측정 수질확인 ²⁰⁾	2	-	3
방류수 수질검사	-	-	1 ²¹⁾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가축분뇨 위탁시설의 경우는 가축분뇨 관련 설치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시 제출된 일 발생량을 계산하여 실제로 위탁처리 사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영수증, 위탁량 등 증빙서류)하여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 허가(신고)당시 제출된 서류만 확인하는

19) 기술관리인 확인 사항은 지도점검표에 표기한 경우만 인정한 개소수

20) 자가측정 수질확인 사항은 지도점검표에 날짜 기재 및 방류수 수질측정 값을 기재한 경우만 인정한 개소수

21) 민원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 수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가축분뇨 위탁시설 미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시설	17	17	18
위탁관련 미확인시설	12	11	11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① 기술관리인 선임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및 자가측정 기록을 확인·기록하고, ② 방류수 수질 상태에 따라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검사의뢰를 하며, ③ 가축분뇨 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법령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지역역량강화사업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센터(■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면(전 ☆☆센터) 지방○○ BA

② 원주시 ☆☆센터 지방○○ BB

내 용

원주시(☆☆센터)에서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 1]과 같이 ◇면 마을종합개발사업과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발주하였다.

[표 1] 지역역량강화사업 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계약일	계약명	계약사항			계약 상대자	비고
		구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2017.12.29.	◇면 마을종합 개발사업 지역 역량강화 용역	전체분	2018.01.02.~2019.12.31.	142,830	◎◎ 연구원	협상에 의한 계약
		1차분	2018.01.02.~2018.12.31.	80,656		
		2차분	2019.01.02.~2019.12.31.	62,174		
2018.09.11.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지역역량강화 용역	전체분	2018.09.12.~2019.12.31.	74,150	◎◎ 연구원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
		1차분	2018.09.12.~2018.12.31.	18,973		
		2차분	2019.01.29.~2019.12.31.	55,177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지방○○ BA는 2015. 4. 20.부터 2018. 1. 14.까지 ☆☆센터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 BB는 2018. 1. 15.부터 현재까지 ☆☆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실무담당자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사전규격 미공개 및 입찰공고기간 미준수

지방계약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입찰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긴급한 경우는 3일)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에 따르면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²²⁾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 사전공개를 해야 하며, 추정가격별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공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센터)에서는 “◇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와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

22)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10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원 이상으로 사전규격 공개를 해야 하는데도 2개 사업 모두 사전규격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는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찰공고기간을 20일로 하여야 하는데도 10일²³⁾로 하는 등 입찰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는 제한종류를 ①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⑧ 중소기업자 항목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난이도·규모의 대소·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범위를 정하되,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과업 범위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학술·연구용역, 소프트웨어개발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면허보완이 가능하도록 공동도급계약 가능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원주시(☆☆센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① 소프트웨어개발사업(디지털콘텐츠개발) 업종(면허), ② 지역제한²⁴⁾,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발주한 당해 사업(권역단위 종합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지역역량강화용역) 관련 용역 수행이 가능한 대학

23) 입찰공고기간: 2017. 11. 17. ~ 2017. 11. 28.

24) ◇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강원도내 업체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지역역량강화: 원주시내 업체

※ 강원도 지역제한 대상사업임

(부설연구소 포함)이나 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으로 제한하였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을 평가 실시하는데도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이 있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2개 업체가 입찰하거나 단독응찰로 유찰²⁵⁾되었으며,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천한 번호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안서평가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절차를 이행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가 추천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구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주시(☆☆센터)에서는 “◇면 마을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등 2건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을 규정에도 없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누어서 당연직 3명을 ■과장, 사업추진 마을 추진위원장, ◇◇담당으로 정하고,

25)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지역역량강화: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다시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위촉직 예비 위원명부는 원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주시 읍면·권역발전협의회 위원 등의 인력현황을 참고하여 임의로 예비평가위원 명단을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은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촉직 인원 수 만큼 예비위원 중에서 제안서 제출한 회사별로 각 4회 추천하여 중복된 명단으로 우선 선정하고, 잔여 위원은 추천된 위원 중에서 예비명단 작성 번호순으로 정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별로 각각 7명과 5명 등 제각각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해야 하는데도 ■과장을 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표 2] 제안서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사업명	계획수립	예비위원	평가위원	위원선정	평가방법	평가일시
◇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2017.12. 7.	17명 (당연3, 위촉14)	7명 (당연3, 위촉4)	업체별 4회 추천 중복된 명단 우선 선정 추천된 위원 중 예비명단 작성 번호 순으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2017.12.11.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지역역량강화	2018. 9. 4.	18명 (당연3, 위촉15)	5명 (당연3, 위촉2)	업체별 4회 추천 중복된 명단 우선 선정 추천된 위원 중 예비명단 작성 번호 순으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2018. 9. 6.

4.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정성적 평가 검토 소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할 때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이나 정보화·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센터)에서는 협상적격자 선정방법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입찰공고와 다르게 [표 3]과 같이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고,

정성적 평가를 평가위원별로 평가한 합계점수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여야 함²⁶⁾에도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지역역량강화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명	입찰 참여업체	제안서평가결과(부당)				제안서평가결과(정당)			
		기술능력 (100점)		기술능력 (80점 환산)	가격 (20점)	기술능력 (100점)		기술능력 (80점 환산)	가격 (20점)
		정량적	정성적			정량적	정성적		
◇면 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연구원	15	76.5	73.2	20	15	75.85	72.68	20
	◆◆	14	75.35	71.48	18.4	14	75.45	71.56	18.4
☒면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지역역량강화	◎◎연구원	15	74	71.2	-	15	77.6	74.08	-

※ ☒면: 제공고 입찰 후 수의계약(기술평가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 실시, 가격은 수의시담으로 진행)

26) 단,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검토, 계약방법 결정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의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강 원 도

주의 요구

제 목 공사 하도급관리계획 이행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① 하도급 비율 ②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③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④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⑤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⑥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의 세부심사항목으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²⁷⁾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기준²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

27)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평가항목 ①~⑥) : 12점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평가항목 ①~⑥) : 10점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평가항목 ②, ④, ⑤): 5점
2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사감독자는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적격심사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추진에 따른 적격심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면 당초 계획서 상의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다른 공정에 하도급을 해야 한다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 [별첨]과 같이 “★★천 재해예방사업” 등 7건에 대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획대로 예정된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실제로는 공종과 하수급인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을 중앙부처 및 도에서 문서를 시행하여 통보²⁹⁾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29)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 통보”(행정안전부 △과-1928(2017. 11. 1.))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유의사항 통보”(강원도 ●과-31492(2017. 11. 2.))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주의] ①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공사는 계약요청부서 등에 하도급관리계획을 반드시 알려주는 절차를 통해, 공사감독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8]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신분변동에 따른 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관 련 자 원주시 ☆과 지방★★ BC

내 용

원주시(☆과,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방★★ BC는 2017. 7. 1.부터 현재까지 실무자로서 급여 및 수당, 공무원연금 등 공무원 보수연금·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1. 특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³⁰⁾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근무수당에 해당되는 특수업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공로연수파견, 국외파견, 국외출장 등)

30) 특수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별표9)

1. 기술정보수당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3. 연구업무수당 4.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5. 교직수당 6. 항공수당 7. 함정근무수당 8. 장려수당 9.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10.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11. 특수직무수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원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공로연수 파견 근무 후 퇴직한 지방♠♠ DA 등 공로 연수자 12명에게 특수업무수당(의료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으로 총 7,32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특수업무수당 과지급 현황

(단위 : 원)

공로연수자 성명	공로연수기간	특수업무수당 과지급 내역			비고
		수당명	지급기간	금 액	
12명				7,320,000	
BD	'17. 7. 1.~'18. 6.30.	의료업무	'17. 7.~'18. 6.(12개월)	600,000	
BE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600,000	
BF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600,000	
BG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600,000	
BH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840,000	
BI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840,000	
BJ	'18. 1. 1.~'18.12.31.	기술정보	'18. 1.~'18.12.(12개월)	480,000	
BK	'18. 7. 1.~'19. 6.30.	기술정보	'18. 7.~'19. 6.(12개월)	600,000	
BL	'18. 7. 1.~'19. 6.30.	기술정보	'18. 7.~'19. 6.(12개월)	600,000	
BM	'18. 7. 1.~'19. 6.30.	기술정보	'18. 7.~'19. 6.(12개월)	360,000	
BN	'18. 7. 1.~'19. 6.30.	기술정보	'18. 7.~'19. 6.(12개월)	600,000	
BO	'18. 7. 1.~'19. 6.30.	기술정보	'18. 7.~'19. 6.(12개월)	600,000	

2.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르면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5항에서는 휴직인 경우 월중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2019. 4. 12. 조례 제175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르면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휴직한 경우

에는 아래 산식³¹⁾에 따라 산출된 연가일수를 공제하며, 같은 조례 제25조에서는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과, ●과)에서는 휴직자의 경우 연가보상비는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기준 및 산식에 따라 연가 가능한 일수를 정확히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병역 휴직자인 ◎◎8급 BP의 연가보상일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연가보상비 602천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 휴직자(병역) 연가보상비 과지급 현황

(단위: 원)

지급일자	지급대상자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비고
	직급	성명	휴직기간 (병역)	연가보상일수 산정					연가보상비 (정)지급액 (A)	연가보상비 (오)지급액 (B)	
				법정연가 일수 (a)	연가 사용 (b)	연가 미사용 (a-b)	제외 기간 (월)	연가 보상 일수			
2018.12.20	◎◎8	BP	2017. 3. 6 ~ 2018.11.30	14	0.5	13.50	11	2	100,380	702,650	602,270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월 정액분(10시간)은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주시(☼과, ●과)에서는 해당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장기 미근무자가 월중 복직할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시 정액분(10시간)은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31)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12월]× 해당 연도 연가일수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 ●과)에서는 [표 3]과 같이 ◆◆8급 BQ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89천 원을 휴직기간 중에 과다 지급하였다.

[표 3] 시간외근무수당 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직 급	성 명	육아휴직기간	해당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과지급액 (b-a)
				정(a)	오(b)	
◆◆8급	BQ	2016. 7.17.~ 2017. 7. 1.(349일)	2017. 6	-	89,800	89,800

4.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르며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금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³²⁾은 강등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하고, 정직은 보수 전액을 감하며,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기간³³⁾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임용 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2)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 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33) ①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②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따라서 원주시(☼과,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는 감액하고,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 ●과)에서는 [표 4]와 같이 2018. 10. 18.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7급 BR에게 보수의 1/3 금액인 1,188천 원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정근수당 1,786천 원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4] 징계처분자 보수 및 정근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원)

직 급	성 명	징계현황	보수 1/3 감액 기간	월 감액분 (a) : 1,188,360원	정근수당 지급 월	정근수당 (b)	부적정 지급 (a+b)
▽▽7급	BR	감봉 1월 (‘18.10.18. 처분)	’18.10.18.~10.31.	10월분: 527,040	’19. 1월	1,786,250	2,974,610
			’18.11.01.~11.17.	11월분: 661,320			

※ 정근수당(b)은 감사기간 중 자체 환수 조치 함(2019. 6. 20.)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공로연수자 및 휴직자, 징계처분자 등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총 9,200,43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수당 지급 시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및 변상금 징수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전 ㉠과, 지방㉠㉠)	지방★★	BS
	② 원주시 ▼과(전 ㉠과)	지방◆◆	BT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BT는 2014. 10. 23.부터 2017. 1. 8.까지 ㉠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원주시 공유재산인 원주시 ㉠읍 토지의 매각업무를 처리하였고, 지방㉠㉠ BS는 2017. 4. 1.부터 2019. 1. 13.까지 ㉠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원주시 ◆동 토지의 매각업무를 처리하였다.

1. 무단점유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시 변상금 징수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과거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과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매수자(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후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원주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원주시 ㄹㄹ읍 토지를 2012. 12. 31. 이전부터 사찰 <<사가 직접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로 해당 점유·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있어 매각 시 해당 공유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³⁴⁾ 등을 통해 매수자가 과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016. 7. 8.(매각일자) 기준으로 12,850천 원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매각하였다.

그 결과 변상금 12,850천 원 중 7,065천 원의 경우 변상금 청구를 위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머지 5,785천 원의 경우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없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현황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목	면적	매각일자	매각금액	매수인	매각 당시 변상금(추정)	시효가 남아있는 변상금(추정) ³⁵⁾
ㄹㄹ읍	종교 용지	1,000	2016.7.8.	114,477,300	사찰 <<사	12,850,380	5,785,160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부적정

34) 토지대장: 2001. 10. 19.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2003. 3. 31. 총괄표제부 작성

35) 2019. 6. 28. 감사일 현재 시효가 남아있는 금액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재산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원주시 ◆동³⁶⁾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도로에 접해 있고 재산가격이 43,302천 원으로 30,000천 원 이상이고, [그림]과 같이 토지 모양이 길쭉한 형태이나 토지의 너비가 넓은 곳은 약 10m로 공유재산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개별필지로 공유재산을 이용·활용가치가 있어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함에도 인접 토지 원주시 ◆동 의 소유자인 BU에게 2017. 8. 24. 수의계약으로 매각³⁷⁾함으로써 입찰 경쟁을 통한 수입 증대의 기회를 일실했다.

[표 2] 일반재산 매각 현황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예정가격	매각금액	매각방법	매각일자	매수인
◆ 동	도로	486	191,113,800	191,113,800	수의계약	2017.8.24.	BU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6) 2017. 6. 8.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관리됨.

37)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1호: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2.30.>

[그림] 매각 토지 현황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매각 시 부과징수하지 않은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변상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시 변상금 부과징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적용하여 매각방법을 결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처분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강 원 도

통보(모범사례)

제 목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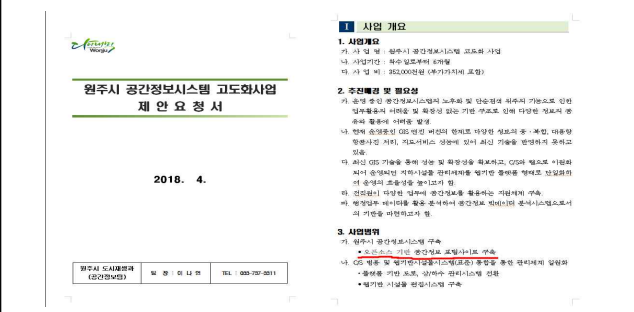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1998년부터 도시기반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사업을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간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장비의 노후화 및 단순기능 제공 등으로 시스템 활용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간분석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시스템을 2018. 5. 23.부터 2018. 12. 19.까지 고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오픈소스³⁸⁾ GIS엔진을 활용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원주시(▣과)에서는 기존 특정 업체가 개발한 GIS엔진을 구입하여 활용함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제약이 많았고,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등의 자동변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새로운 엔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무상의 오픈소스 GIS엔진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입비용 전액을 절감하는 등 오픈소스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38) 오픈소스(open source)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p>원주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제안요청서</p> <p>2018. 4.</p> <p>원주시 도시정보과 (공간정보팀)</p> <p>제안요청서</p>	 <p>공간·행정정보 합쳐 보기 편한 지도 제공</p> <p>시 관련 부서 의견 수렴 - 빅데이터 기반 분석서비스 등 지원</p> <p>【원주】시민들에게 더 알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주시 차원의 공간정보 시스템이 개발된다.</p> <p>2010년 구축했던 공간업무 지원 시스템을 공간 및 행정정보가 서로 융합서비스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p> <p>이를 위해 시는 18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시스템 활용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갖고,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했다.</p> <p>공간정보 시스템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설물 웹 편집기능 구현, 공간정보와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기반 공간분석 융합서비스, 자신만의 자료를 활용한 나만의 지도, 투명한 과세를 위한 과세 지원 기능,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p> <p>그동안 GIS엔진은 특정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구입, 활용해야지·보수 등에 제약이 많았다. 시는 무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 엔진을 도입해 스마트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오픈소스가 다양한 공간정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p> <p>노석천 시 도시재생과장은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정보 대민서비스를 통해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p> <p>유확립기자 hyoo@kwnews.co.kr</p>
제안요청서	언론보도(2018. 6.19. 강원일보)

2.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공간분석으로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원주시(☐과)에서는 그동안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상수관로의 설치일자 및 관 재질과 위치 등 업무담당자가 건별로 지도에서 지번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였던 것을 새울행정, 지방세, 세외수입, 건축행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로명주소시스템 등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융합하고 추출하여 공간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p>무실동의 상수관로(주철관...)</p> <p>분석레이어선택</p> <p>행정동명이 '무실동' 포함된 행정동경계의 반경 10 m 영역에 업무라도 겹치는 레이더</p> <p>관매질이 덕탄일주철관(DCIP)인 상수관로를 공간분석합니다.</p> <p>레이더</p>	 <p>무실동의 상수관로(주철관...)</p> <p>공간분석 결과 (☐동에 관 재질이 주철관인 상수관로 현황)</p>
공간분석 조건 화면	공간분석 결과 (☐동에 관 재질이 주철관인 상수관로 현황)
 <p>공간분석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식품위생업소)</p>	 <p>공간분석 (인구 분포)</p>

3. 텍스트 자료를 업무지도로 제작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원주시(☐과)에서는 행정업무 자료 중 주소가 있는 자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도에서 건별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하던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주소, 경위도, XY좌표가 있는 텍스트 자료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지도로 제작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한눈에 정보를 파악하고 추가 행정수요 예상지역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업무지도 작성 화면	업무지도 활용 사례(2019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4. 지방세·세외수입의 과세 투명성 제고 및 누락세수 확보 (강원도 최초)

원주시(☐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간지도를 제공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입지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농지 및 임야 종합합산대상 등의 자료를 지방세와 연계하여 공간지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도와 중첩하여 도시지역분 과세가 누락된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현황 등을 세외수입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간지도로 제공함으로써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건축물대장, 로드뷰 등과 중첩하여 부과 누락된 현황 및 무단점유·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의 투명성 제고 및 누락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일원화 및 웹 편집으로 효율적인 체계 마련

원주시(☞과)에서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공간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제공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비대상 도로 및 지하시설물 자료에 대하여는 웹 편집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정확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6. 도로굴착공사 실시간 안내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최소화(강원도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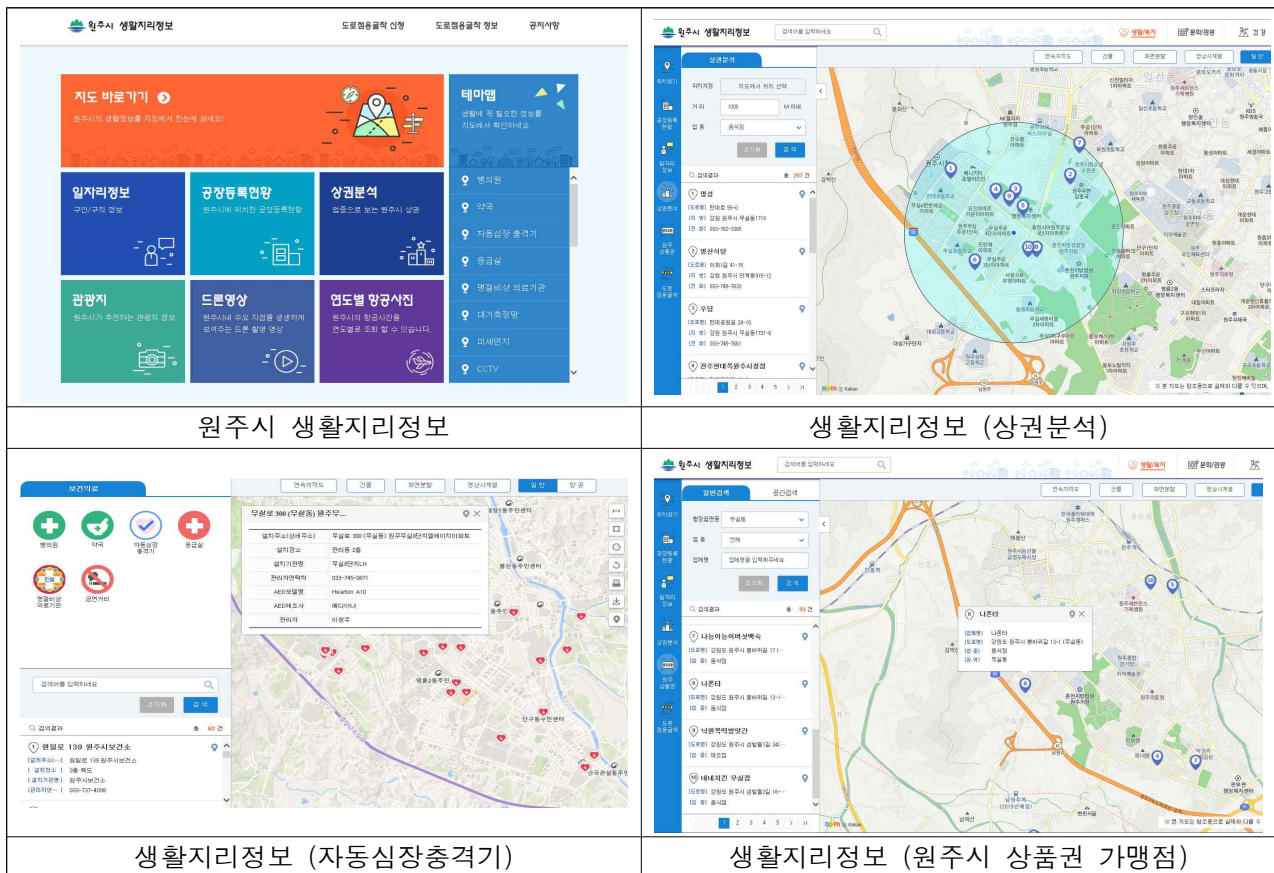
원주시(☞과)에서는 민원인이 시청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입 운영하고 있는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을 통해 신청되는 도로굴착공사를 강원도 공공데이터 포털에 OPEN API³⁹⁾로 등록 요청하여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시간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원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대민서비스 사이트인 생활지리정보로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39) Open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7. 상권분석 등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생활지도서비스 제공(강원도 최초)

원주시(원주)에서는 연도별 항공사진, 일자리 정보, 공장등록현황, 자동심장충격기, 원주시 상품권 가맹점 정보와 더불어 일정한 거리 내 업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권분석 기능 등 공간정보시스템의 자료 중에서 시민에게 유용하고 공개가능한 정보를 생활지리정보 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원주시(☞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오픈소스 GIS엔진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오픈소스가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업무자료를 업무지도로 제작하고 이러한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통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 오픈소스 GIS엔진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다양한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신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 지원,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융합한 업무지도 제작으로 업무체계 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고,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 취득세 등 부과 누락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표 1]과 같이 취득세 등 137건 62,308,040원을 부과누락 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 누락 현황(가산세 포함)

(단위: 건, 원)

구 분		건수	미(과소)부과액	과세대상	비 고
합계		137	62,308,040		
취득세 계		18	22,440,720		
	취득세 (20,689,030)	11	1,733,960	▣ 건축물 11(가설 3, 불법 4, 시설 4)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는 취득세 건수에 포함
		7	18,955,070	▣ 지목변경	
	지방교육세		55,350	▣ 취득세 부과 누락분	
	농어촌특별세		1,696,340	▣ 취득세 부과 누락분	
등록면허세 계		78	1,803,600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축조신고(7) ▣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71)	
주민세 계		41	38,063,720		
	주민세(재산분)	9	4,972,200	▣ 부과누락	
	주민세(종업원분)	32	33,091,520	▣ 부과누락	

※ 지방세 부과누락 세부내역 [별첨 1] 참조

1. 취득세 등 부과 소홀

가.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7조에 따르면 ①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②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⁴⁰⁾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52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2]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BV 등 11명에게 취득세 등 총 1,906,09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40)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표 2]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원)

취득자	취득물건	합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추징사유
BV 등 11명	건축물	1,906,090	1,445,000	288,960	55,350	116,780	미신고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 제7조 제4항과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있으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출세액 신고·납부 대상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기사업자가 임야나 전·답 등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정지작업 등이 수반됨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발생하게 되나 전기사업자들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개시 신고만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 “전력생산이 개시된 발전사업(2015. 8. 20.~2017. 8. 1.)” 과 관련된 해당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를 산출해 본 결과 [표 3]과 같이 20,534,630원⁴¹⁾이 부과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

41) 감사기간 중 과세표준 산정(지가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假)지가로 산출

[표 3]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부과 누락 현황

(단위 : 원)

납세자	지목변경 필지	합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농특세	추징사유
BW 등 7명	●●면 산××-× 외 6	20,534,630	15,795,910	3,159,160	1,579,560	사실상 지목변경 미신고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따라서 원주시(♥과)에서는 [별첨 2]의 “전력생산이 개시된 발전사업”에 따른 25필지 54,580㎡(허가면적)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가 산정부서에 의뢰⁴²⁾하고 통보(협조)받은 지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어야 함에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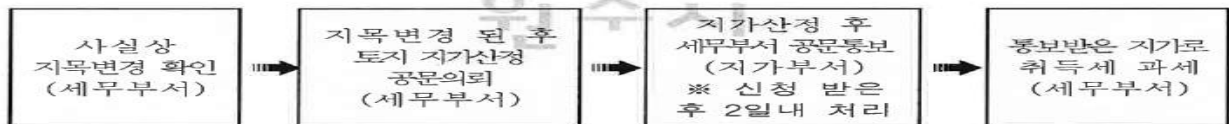
2.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 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가 있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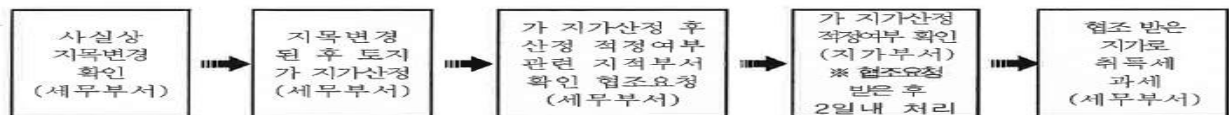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264(2011. 3.18.) “토지 지목변경 관련 시가표준액 산정 지침”(2011. 4. 1. 시행)

◎ 지가산정 절차

<제 1 안>



<제 2 안>



➡ 자치단체 업무환경에 따라 제1안이나 제2안 중 반드시 시행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4]와 같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 총 78건 1,803,600원에 대하여 2019. 6. 28.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4]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현황(2016~2018)

(단위 : 원)

면허의 구분	건수	합계	등록면허세	무신고가산세	비 고
계	78건	1,803,600	1,503,000	300,600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7건	97,200	81,000	16,200	미신고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71건	1,706,400	1,422,000	284,400	미신고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주민세 재산분 등 부과 소홀

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부과 누락

「지방세법」 제74조부터 제84조에 따르면 매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해당 사업소⁴³⁾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주민세 재산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5]와 같이 미신고 납부한 주민세 재산분 9건 4,972,20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5] 주민세 재산분 부과누락 현황

(단위 : m², 원)

납세자	사업장소재지	과표(면적)	합계	주민세	무신고가산세	비 고
(주)◀◀ 등 9	원주시 ◇면 외 8	16,574	4,972,200	4,143,500	828,700	미신고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4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나.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부과 누락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제76조까지,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4까지, 제8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78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르면 매월 말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는 해당 사업소에서 종업원⁴⁴⁾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⁴⁵⁾에 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주민세 종업원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다만,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000천 원(2,700천 원*50)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 6]과 같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최근 12개월 평균액이 135,000천 원을 초과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주)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32개월분 33,091,52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6]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누락 현황

(단위 : 원)

업체명	신고납부 누락기간	합계	본세	무신고가산세
계	32개월	33,091,520	27,576,370	5,515,150
◈(주)	• 2018. 4~12월(9개월) • 2019. 1~5월(5개월)	14,396,670	11,997,290	2,399,380
♥♥(주)	• 2018. 12월(1개월) • 2019. 1~5월(5개월)	5,979,470	4,982,900	996,570
(자)♠♠	• 2018. 12월(1개월) • 2019. 1~5월(5개월)	6,384,720	5,320,620	1,064,100
♣♣(합)	• 2018. 12월(1개월) • 2019. 1~5월(5개월)	6,330,660	5,275,560	1,055,100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 44)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밖의 종사자로서 급여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 국외근무자를 제외한다.
- 45) “종업원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고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① 취득세 등 부과 누락분 137건 62,308,040원을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세예고 후 부과하시기 바라며,

② “전력생산이 개시된 발전사업”과 관련된 필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2]

강 원 도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 취득세 등 감면분 부과 누락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표 1]과 같이 감면분 취득세 등 10건 35,305,630원을 부과 누락하였다.

[표 1] 지방세 취득세 감면분 부과누락 현황(가산세 포함)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미(과소)부과액	과세대상	비 고
합계	10	35,305,630		
취득세 (31,010,490)	7	11,126,490	▣ 자경농민의 취득 부동산 감면 추정	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는 취득세 건수에 포함
	2	16,140,000	▣ 농업법인의 취득 부동산 감면 추정	
	1	3,744,000	▣ 종교단체의 취득 부동산 감면 추정	
지방교육세		2,239,020	▣ 취득세 과세 누락분	
농어촌특별세		2,056,120	▣ 취득세 과세 누락분	

1. 자경농민의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하거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감면규정에 따라 [표 2]와 같이 감면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총 7건 12,943,63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자경농민 감면 취득세 부과누락 현황(가산세포함)

(단위 : 원)

납세자	취득물건	취득일	과세표준	세액				추징사유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계	7건			12,943,630	11,126,490	597,020	1,220,120	
BX	토지 □면 1879.0000㎡ 매매	2018.11.13.	100,000,000	2,100,000	1,800,000	100,000	200,000	2019. 5. 2. 매각
BY	토지 ♠♠면 499㎡ 매매	2017.10.13.	47,405,000	995,500	853,290	47,400	94,810	2019. 5.28. 매각
BZ	토지 ♣♣동 1646㎡ 매매	2016. 9. 6.	323,700,000	6,797,700	5,826,600	323,700	647,400	2016.11. 7. 매각
CA	토지 ●●면 159㎡ 매매	2017.12.18.	20,439,077	429,200	367,900	20,430	40,870	2018. 5. 4. 매각
CB	토지 ●●면 595㎡ 매매	2017. 4.10.	47,792,129	1,003,620	860,250	47,790	95,580	2018.10.29. 매각
CC	토지 ♣♣동 613.0000㎡ 매매	2017.11.21.	52,105,000	1,094,210	937,890	52,110	104,210	2018. 9.21. 직접미경작
CD 외 1	토지 ♠♠면 1560.0000㎡(3/5지분감면) 상속	2017. 1.12.	31,044,000	523,400	480,560	5,590	37,250	2018. 9.21. 직접미경작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2. 농업법인의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감면규정에 따라 [표 3]과 같이 감면 유예기간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농업회사법인 ○○(주)” 과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법인” 이 경감 받은 취득세 등 총 2건 18,150,00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3] 농업법인 감면 취득세 부과누락 현황(가산세포함)

(단위 : 원)

납세자	취득물건	취득일	과세표준	세액				추정사유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계	2건			18,150,000	16,140,000	1,330,000	680,000	
농업회사법인 ○○(주)	토지 ■■면 6953㎡ 매매	2018. 6. 1.	650,000,000	17,550,000	15,600,000	1,300,000	650,000	유예기간(1년) 내 미사용
◆◆법인	토지 ▲▲면 490㎡ 매매	2016.11. 3.	30,000,000	600,000	540,000	30,000	30,000	2017.11.16. 매각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3. 종교단체의 취득 부동산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감면규정에 따라 [표 4]와 같이 감면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 4,212,000원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다.

[표 4]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 감면 부과누락 현황(가산세포함)

(단위 : 원)

납세자	취득물건	취득일	과세표준	세액				추정사유
				합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교회	토지+건물 ●●면 토지 684.0000㎡ 건물 82.58㎡ 매매	2016. 4. 1.	78,000,000	4,212,000	3,744,000	312,000	156,000	유예기간(3년) 내 미사용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취득세 등 감면 추정 대상분 10건 35,305,630원을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세예고 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비과세·감면의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차량 종류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소

관 련 자 원주시 ♥과(전 ◆소) 지방▨▨▨ CE

내 용

지방▨▨▨ CE은 2016. 7. 18.부터 2019. 3. 31.까지 ◆소에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 차량의 종류변경은 차량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을 한 경우로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52조 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등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의 종류변경을 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CF 등 499명에게 취득세 등 총 21,909,44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차량종류 변경 취득세 미신고 부과누락

(단위 : 원)

취득자	취득물건	합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비고
CF 등 499명	××나××××(픽업덤편개 등) 등	21,909,440	18,260,290	3,649,150	미신고

※ 원주시 제출 감사자료 재구성, 세부내역 별첨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차량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분 499명 21,909,440원을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세예고 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를 철저를 하여 누락되는 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수입금(참가비)이 있는 보조사업 수입금 미정산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동(전 ▣과) 지방◆◆ CH

② 원주시 ●●면(전 ▣과) 지방◆◆ CI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 도모 및 원주시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체육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 CH는 2016. 7. 18.부터 2017. 10. 9.까지, 지방◆◆ CI는 2017. 10.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검사와 지도감독 업무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표 1] 참가비가 있는 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 원)

연도	체육 대회명	보조 사업자	사업기간	정산일자	참석 인원	참가비	참가비 수입금 ⁴⁶⁾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⁴⁷⁾	
총 계							265,764	367,092	299,990	67,102	
2016	♥♥대회	원주시 ◆◆회	2016. 7.13.~ 10.30.	2016.11.7.	1,443명	2만원/명	33,560	35,220	30,000	5,220	
	●●대회		2016. 9. 6.~ 11.10.	2016.11.8.	325팀	4.2만원/팀	8,400	41,640	35,000	6,640	
	▣▣대회		2016. 7. 6.~ 8. 31.	2016.8.25.	1,209명	4만원/팀	49,460	45,000	35,000	10,000	
2017	♥♥대회	원주시 ◆◆회	2017. 3.20.~ 5.15.	2017.7.10.	1,174명	2만원/1명	23,480	35,170	30,000	5,170	
	●●대회		2017. 2.22.~ 4.30.	2017.4.19.	325팀	5.4만원/팀	11,934	39,500	35,000	4,500	
	▣▣대회		2017. 8. 17.~ 10.3.	2018.4.23.	1,203명	4만원/팀	47,760	44,990	34,990	10,000	
2018	♥♥대회	원주시 ◆◆회	2018. 3. 20.~ 5.30.	2018.5.18.	1,484명	2만원/1명	29,680	35,750	30,000	5,750	
	●●대회		2018. 2. 27.~ 4.30.	2018.4.23.	325팀	5.4만원/팀	10,530	42,000	35,000	7,000	
	▣▣대회		2018. 6. 14.~ 8.10.	2018.8.23.	1,246명	4만원/팀	50,960	47,822	35,000	12,822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대회 등 보조사업의 교부 결정을 할 때에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는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원주시(▣▣▣과)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참가비 수입금을 포함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조금(수익금 포함) 반환을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교부결정 했던 사업비(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해

46) 참가비 수입금 : 2019년 원주시 종합감사 기간에 보조사업자(원주시◆◆회)로부터 제출받은 체육대회별 수입금 집행내역 자료임

- 원주시♥♥♥협회 자부담 내역분(2016~2018), 원주시◆◆◆협회 자부담 내역분(2016~2018), 원주시▣▣▣협회(2016~2018)

47) 자부담: 참가비를 자부담의 재원으로 하여 사업계획(집행계획)을 원주시로부터 승인받은 금액

서만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나머지 참가비 수입금에 대해서는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19년 원주시 종합감사 기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비가 있는 체육대회의 수입금(참가비 등) 집행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원주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회는 참가비를 훈련비 명목으로 대회에 참가한 각 ♥♥장에 관내지역에는 1인당 5천 원, 관외지역에는 1인당 1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대회를 치르고 남은 금액은 1/n로 각 도장으로 반환하여 모든 비용을 소진하였고,

◆◆대회는 참가비 수입금을 모두 ◆◆대회 관련 경비로 집행을 하고, 일부는 대한◆◆협회에 제출하는 대회 개최비와 유소년 후원금, ◆◆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금 등 ◆◆ 관련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대회는 보조금과 자부담은 교부 목적대로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으나,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남은 참가비 수입금에 대해서는 협회 내에서 정산하고 자체재원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원주시(▮▮▮▮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에 수익이 발생 되는 경우에 원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지만, [표 2]와 같이 참가비 수입금 67,102천 원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승인(교부결정) 및 정산검사를 하고, 미승인된 참가비 수입금 198,662천 원은 정산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참가비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참가비 수입금이 있는 보조사업의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참가비 수입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체육대회명	연도별	참가비 수입	참가비 지출			비고
			계	자부담(승인)	미승인(대회종료 후 잔액)	
총	계	265,764,000	265,764,000	67,102,000	162,466,990 (36,195,010)	
♥♥대회	2016	33,560,000	33,560,000	5,220,000	17,629,020 (10,710,980)	집행 잔액은 참가자에게
	2017	23,480,000	23,480,000	5,170,000	15,136,710 (3,173,290)	

체육대회명	연도별	참가비 수입	참가비 지출			비고
			계	자부담(승인)	미승인(대회종료 후 잔액)	
	2018	29,680,000	29,680,000	5,750,000	17,922,950 (6,007,050)	반환
●●대회	2016	8,400,000	8,400,000	6,640,000	2,700,000 (-940,000)	●●대회에 모두 집행
	2017	11,934,000	11,934,000	4,500,000	7,374,000 (60,000)	
	2018	10,530,000	10,530,000	7,000,000	2,980,000 (550,000)	
▣▣▣▣대회	2016	49,460,000	49,460,000	10,000,000	38,706,490 (753,510)	▣▣▣▣협회 재원으로 귀속
	2017	47,760,000	47,760,000	10,000,000	31,152,010 (6,607,990)	
	2018	50,960,000	50,960,000	12,822,000	28,865,810 (9,272,190)	

※ 원주시◆◆회 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회, ◆◆대회, ▣▣▣▣대회의 보조사업의 자부담으로 승인한 참가비 수입금 외에 198,662천 원의 참가비 수입금 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는지를 정산검사 하시기 바라며,

② 참가비 수입금의 정산결과 대회개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집행된 참가비 수입금 및 집행 잔액이 확인되면 반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수익금의 반환 또는 사용용도를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수익금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및 정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5]

강 원 도

통보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철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원주시(▣과)는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비하여 [표 1]과 같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1,196㎢)의 67.3%에 해당하는 805㎢가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시설이며 2020. 7. 1. 일몰제⁴⁸⁾가 시행되면 해제 이후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매입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확보 및 정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민의 쉼터이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은 2018년 기준 340㎢가 장기미집행시설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속한 정비와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결정시설	집행	미집행				
				계	장기미집행			10년미만
					소계	일몰제	장기	
결 정(2016.12.31. 기준)		3,631	2,937	694	595	415	180	99
1차 정비 (2017. 4. 7.)	해제시설				59	59		
	해 제 후	3,572	2,937	635	536	356	180	99
2차 정비 (2019. 1.25.)	해제시설				283	190	93	
	해 제 후	3,600	3,237	363	253	166	87	110
3차 정비 (2019. 7.예정)	해제시설				82	55	27	
	해 제 후	3,613	3,331	282	171	111	60	111

48) 2000. 7. 1.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2020. 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시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체계적 정비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에 따르면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 7. 1.로 정하고 있어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 7. 1.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계획적 토지이용의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시정책과-10702(2014.12.26.)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원주시(☐과)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체계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2020 원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용역에 2020. 7. 1. 그 효력을 상실하는 415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2017. 4. 7.⁴⁹⁾ 일몰제 대상시설 중 59개소의 우선해제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해당 용역 수행과정에서 파악된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맹지 발생, 도시교통 가로망 단절, 도시공원 소멸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주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결정(변경)’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2019. 1. 25.⁵⁰⁾ 일몰제대상시설⁵¹⁾ 190개소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83개소를 해제하고 2019. 2. 12. 강원도지사에게 일몰제대상시설 55개를

49) 원주시고시 제2017-75호(2017.04.07.)로 해제

50) 원주시고시 제2019-20호(2019.01.25.)로 해제

51) 2000. 7. 1.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하여 2020. 7. 1. 효력을 상실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포함하여 82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가 신청하였다.

[표 1]과 같이 3차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을 415개소에서 111개소로 정비하고 있으며 2019. 6. 28. 감사일 현재 최종적으로 111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20. 7. 1. 일몰제 시행 전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마무리하고자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 용역을 2019. 3. 19. 착수하여 추진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제4장 제1절에 따르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통한 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개발행위허가 운영 기준 등 인·허가 관리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 현황에 맞춘 시설결정 또는 기타 관리방안 등 4가지 유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공원별로 주민의 이용현황 및 향후 개발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별 및 계획적 관리방안의 마련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원주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해제(축소)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표 2]와 같이 자연경관지구 6개소 및 보전녹지지역 7개소 지정을 통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공원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일제 조사·검토하여 현황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하여 일몰제 시행 이후에도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 속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원 및 녹지 면적 축소 이후 난개발 등에 따른 잠재적인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 장기미집행 공원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

구분	공원명	면 적(㎡)			최초 결정일	관리방안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46,138	감) 46,138	-	건고제283호(67.4.19)	자연경관지구 신설
폐지	\$\$공원	83,200	감) 83,200	-	건고제549호(85.12.16)	"
폐지	&&공원	435,386	감) 435,386	-	건고제283호(67.4.19)	"
폐지	ㄹㄹ공원	279,000	감) 279,000	-	강고제103호(89.8.22)	"
폐지	◇◇공원	286,356	감) 286,356	-	강고제5호(77.1.31)	"
폐지	@@공원	62,710	감) 62,710	-	강고제103호(82.8.2)	"
폐지	# #공원	70,780	감) 70,780	-	강고제59호(77.4.19)	보전녹지지역 변경
폐지	♪ ♪공원	29,105	감) 29,105	-	강고제59호(77.4.19)	"
폐지	ㄷㄷ공원	50,414	감) 50,414	-	강고제103호(82.8.2)	"
변경	▣▣공원	282,096	감) 211,003	71,093	건고제549호(85.12.16)	"
변경	♫ ♫공원	100,820	감) 29,302	71,518	강고제124호(00.6.15)	"
변경	▣▣3호공원	286,540	감) 188,020	98,520	건고제360호(98.11.2)	"
변경	◎◎공원	721,394	감) 498,387	223,007	건고제283호(67.4.19)	"

3. 재정적 집행방안 수립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 적극 추진

원주시(▣과, ⊕과)에서는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집행계획을 2016년 1월에 수립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공원,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공원, 해제대상 공원을 구분 관리하였으며 [표 3]과 같이 재정적 집행방안으로 원주시의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반영 요청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과 새마음공원 등 총 8개소(약56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확보와 도심지 내 쉼터인 공원·녹지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표 3] 재정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현황

구 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계	보상비	사업비
합 계		3,421	1,979	1,442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	2,304	1,160	1,144
공 원	공원 8개소	1,117	819	298

4.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

가이드라인 제3장 제1절에 따르면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집행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과 연계를 통한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는 미조성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매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원 시설이 아닌 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주시(㉠과, ㉡과)에서는 2016년 1월 수립한 □□별집행계획 중 도시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민간공원으로 추진할 공원으로 [표 4]와 같이 4개 공원(약124만㎡)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추진하여 도심지내 공원·녹지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원주시에서는 토지 및 공원시설(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는 비용은 2,984억 원이며 강원지역을 기준으로 지역경제과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2,24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763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1,915명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채납 비용 2,98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표 4] 비재정적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현황

공 원 명	지정년도	면적(㎡)	사업비(억 원)			비 고
			합 계	보상비	조성비	
4 개소		1,244,274	2,984	2,022	962	
⊗⊗공원 1구역	1985.12.26.	462,417	1,331	905	426	2020.12. 공원시설 준공
⊗⊗공원 2구역	1985.12.26.	318,572	942	637	305	6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	1967. 4.19.	255,445	345	265	80	7월 협상대상자 재선정
⊠⊠공원	1967. 4.19.	207,840	366	215	151	도시계획위원회 준비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통보]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도시공원 정비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6]

강 원 도

시장·주의 요구

제 목 도로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고자 도로개설사업을 [표 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 1] 도로개설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아파트-□□재간 (중1-12) 도로개설공사	L=0.963km (B=20.0m) (생태통로 20m)	4,716	2018.12.11.	2018.12.12. ~2020.11.30.	(주)■■■ (CJ)
●● 1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0.88km (B=8.0m)	2,383	2019.04.09.	2019.04.15. ~2020.07.07.	(주)△△ (C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아파트-□□재간(중1-12)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 9,197천 원(제경비 포함), 사토비 155,706천 원(제경비 포함), 비탈면 보호공 22,278천 원(제경비 포함), 총 187,181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 101호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관리활동비(인건비) 35,390천 원(제경비 포함), 발파암 소할비 8,004천 원(제경비 포함), 비탈면 보호공 37,650천 원(제경비 포함), 총81,044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총 268,225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아파트-□□재간(중1-12) 도로개설공사

가. 초급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인건비 반영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⁵²⁾는 초급기술자 1명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초급기술자 1인의 인건비가 간접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간접노무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를 중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9,197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나. 사토 운반거리 미 조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4-5에 따르면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에 대하여 설계시 운반거리 5.0km로 설계 반영하였으나 공사 중 사토장을 변경하여 운반거리가 0.35km로 단축되어 155,706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 감액이 발생되었음

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가 아닌 공사

에도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사토 운반거리 정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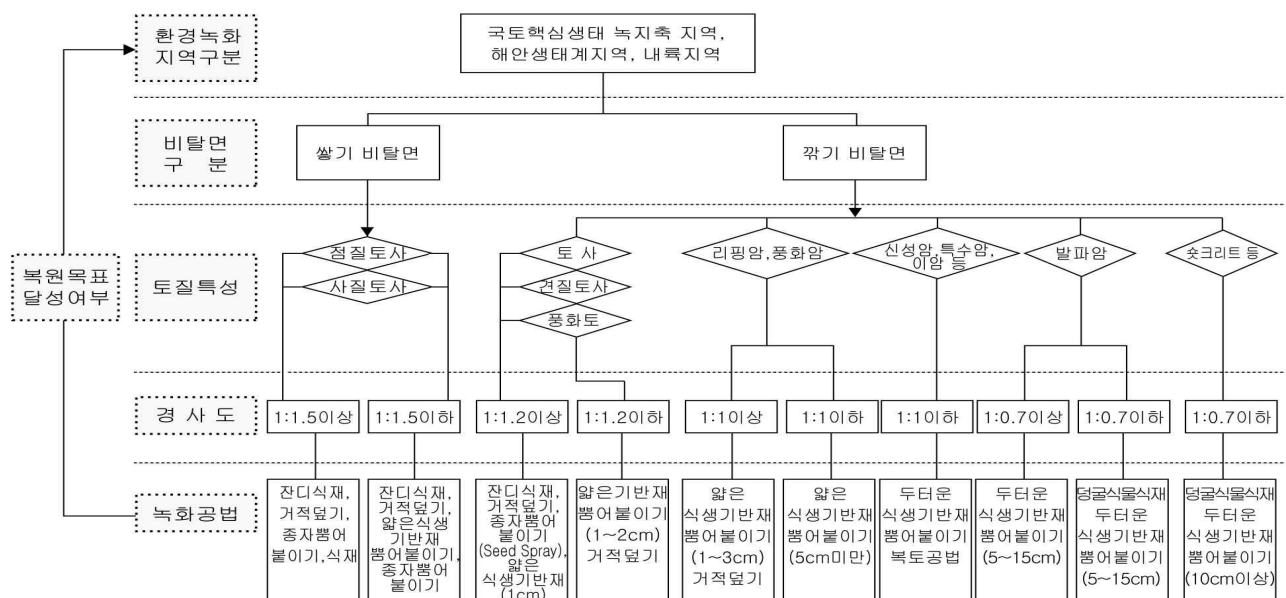
(단위: km, m³, 천 원)

구 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운반거리	수량	사업비	운반거리	수량	사업비	사업비
사토	5.0	41,079	629,324	0.35	41,079	473,618	△155,706

다. 비탈면 보호공 설계 부적정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수량산출 요령에 따르면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09.6.)을 참조하여 얇은기반재 취부공은 토사 또는 리핑암 깎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비탈면의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하며 두께는 각각 1~2센티미터와 3~4센티미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은 발파암 깎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 경관지역이나 주변 비탈면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하며 두께는 5~10센티미터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량산출 시 참조하여야 하는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비탈면 보호공법 선정절차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로공사의 비탈면 보호공 설계를 추진하면서 흙 깎기 비탈면 현장 여건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표 3]과 같이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한 비탈면 녹화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총 22,278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3] 비탈면 보호공(녹생토)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규격 (cm)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규격 (cm)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아파트-□□재간 도로개설공사	계	3,347	188,459	계	3,347	166,181	-	△22,278
	토사 3	3,498		토사 2	3,498		-	
	리핑 5	2,621		리핑 5	2,621		-	
	발파 10	726		발파 7	726		-	

2. ○○ 101호 도로확포장공사

가. 초급품질관리자(시험관리인) 인건비 반영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⁵³⁾는 초급기술자 1명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중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초급기술자 1인의 인건비가 간접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가 아닌 공사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간접노무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를 중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35,39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나. 발파암 소할비 반영 부적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3장 토공사에 따르면 발파암 유용(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 제외)에 따른 기계소할 단가 적용 시 소할물량은 유용량의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로확포장공사 발파암을 굴삭기와 대형브레이커 조합으로 절취하여 발파암에 대한 소할이 불필요함에도 별도 소할을 적용하여 8,00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다. 비탈면 보호공 설계 부적정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수량산출 요령에 따르면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09.6.)을 참조하여 얇은기반재 취부공은 토사 또는 리핑암 깎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비탈면의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하며 두께는 각각 1~2센티미터와 3~4센티미터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두꺼운 식생기반재 취부공은 발파암 깎기 비탈면에 적용하며 미관이 요구되는 주요 경관지역이나 주변 비탈면 식생기반조건, 토질조건, 주변환경,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공법 및 수량을 산출하며 두께는 5~10센티미터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로공사의 비탈면 보호공 설계를 추진하면서 흙 깎기 비탈면 현장 여건에 적합한 비탈면 보호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표 4]와 같이 현장 여건에 비해 과다한 비탈면 녹화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총 37,65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4] 비탈면 보호공(녹생토)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사업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규격 (cm)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규격 (cm)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 101호 도로확포장공사	계	2,888	183,416	계	2,888	145,766	-	△37,650
	리핑 10	2,888		리핑 5	1,625		-	
	발파 10			발파 7	1,263		-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① ○○아파트-□□재간(중1-12) 도로개설공사의 품질관리활동비, 사토비 및 비탈면 보호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총 187,181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 101호 도로확포장공사의 품질관리활동비, 발파암 소할비 및 비탈면 보호공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총 81,04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7]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비탈면 붕괴위험지역 및 노후된 가옥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02.25.~ '15.06.24.	99,125	(주)▲▲	CL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절토사면녹화 8,338㎡	'17.05.10.~ '19.10.11.	1,493,398	(주)□□	CM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8,072ton	'17.04.20~ '19.08.19.	672,826	■ ■ (주)	CN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 1식	'15.02.25.~ '15.06.24.	150,619	(주)◆ ◆	CO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절토사면녹화 9,402㎡	'19.03.28.~ '20.09.17.	1,242,862	(주)□ □	CP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7,225ton	'19.02.18.~ '20.08.10.	545,844	(유)⑤⑤	CQ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비탈면 보호공(녹생토, 줄떼), 비탈면 보강공법 Soil Nailing 등 92,701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비탈면 보호공(녹생토) 26,753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19,454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가. 절토사면 녹화공법 과다설계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5장 깎기비탈면 설계에 의하면 설계□□에서

접근의 어려움이나 사유지로 인하여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조사□□에서 지질현황 및 인근의 깎기비탈면이나 토질상태를 참고하고 [표 2]의 표준경사를 이용하여 깎기비탈면의 경사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시공□□에서 보완조사를 통하여 비탈면 경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토사원지반 깎기비탈면 표준경사

토 질 조 건		비탈면 높이(m)	경 사	비 고
모 래			1:1.5 이상	SW, SP
사 질 토	밀실한 것	5 이하	1:0.8 ~ 1:1.0	SM, SP
		5~10	1:1.0 ~ 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 이하	1:1.0 ~ 1:1.2	
		5~10	1:1.2 ~ 1:1.5	
자갈 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 이하	1:0.8 ~ 1:1.0	SM, SC
		10~15	1:1.0 ~ 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 이하	1:1.0 ~ 1:1.2	
		10~15	1:1.2 ~ 1:1.5	
점 성 토		0~10	1:0.8 ~ 1:1.2	ML,MH,CL,CH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 이하	1:1.0 ~ 1:1.2	GM, GC
		5~10	1:1.2 ~ 1:1.5	
풍화암		-	1:1.0 ~ 1:1.2	시편이 형성되지 않는 암

주) 1. 실트는 점성토로 간주. 표에 표시한 토질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한다.
2. 위 표의 경사는 소단을 포함하지 않는 단일비탈면의 경사이다.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발췌(국토해양부, 2009.12.30.)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2.6.1 비탈면 녹화공법 선정지침에 의하면 깎기 비탈면에서 비탈면 경사도가 1:1.2이하인 경우 토질이 토사, 견질토사, 풍화토인 지역에서는 얇은 식생기반재 뿔어붙이기 1~2cm를 적용하고, 경사도가 1:1.2 이상인 구간에서는 종자뿔어 붙이기(Seed Spray) 또는 얇은 식생기반재 뿔어붙이기 1cm를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추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층분포상태가 매립층(실트섞인 모래), 풍화토층, 풍화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성파탐사 결과에는 최상부 지층은 토

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사도가 1:1.2 이상이며, 지층 최상부가 토사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녹화공법을 얇은 식생기반재 뽐어붙이기 두께를 1~2cm 이내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주시(&과)에서는 비탈면 안정을 위해 사면녹화 공법을 설계에 적용하면서 [표 3]과 같이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사면녹화 두께를 7cm에 39,476천 원(제경비 포함)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5cm에 26,753천 원(제경비 포함)을 반영하여 총 66,229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3] 절토사면 녹화공법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공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두께 (cm)	수량 (㎡)	사업비	두께 (cm)	수량 (㎡)	사업비	두께 (cm)	수량 (㎡)	사업비
계										△66,229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절토면 사면녹화	7	8,338	452,336	2	8,338	412,860	△5	-	△39,476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5	9,402	441,674	2	9,402	414,921	△3	-	△26,753

나. 법면 보호공(줄폐) 경제적 공법 미적용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제2장 비탈면 안전공에 의하면 비탈면보호공은 현지 비탈면의 지형 및 지질, 토양조건, 경사, 방향, 강우량,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공법을 선정,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현지에 잘 부합하는 식생 보호공을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탈면 보호공법 중 줄폐의 경우에는 비탈면 깎기부보다는 흩쌓기 구간에 적용하고 지층이 보통토사인 경우에는 Seed-spray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비탈면 각기부 하단에 비탈면 보호를 위해 반영된 줄떼 공법 보다는 경제적으로 우수한 Seed-spray 공법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원주시(&과)에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비탈면 각기부에 공법 적용이 가능한 Seed-spray 공법 대신 줄떼를 적용하여 [표 4]와 같이 36,655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표 4] 법면보호공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공종 (당초 → 조정)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	사업비	수량 (㎡)	사업비	수량 (㎡)	사업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법면보호공 (줄떼 → Seed Spray)	8,598	182,744	8,598	146,089	-	△36,655

다. 비탈면 보강공법 과다계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비탈면 안정을 위한 대책공법⁵⁴⁾으로 토사 비탈면은 자연사면의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므로 구배완화 공법을 적용하고 표준구배 적용 후 불안정한 구간에 대하여 Soil Nailing 공법을 적용하였다.

표준구배 적용 후 사면 안전해석 결과 STA.0+080 지점과 STA.0+100 지점은 건기·우기시 불안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Soil Nailing 공법(L=8.0m, 1.5×1.5) 적용 후 안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원주시(&과)에서는 비탈면 안정을 위한 대책공법으로 Soil Nailing 공법을 적용하면서 [표 5]와 같이 사면 안전해석에서 적용한 보강재 길이 L=8.0m 보다 큰 L=10.0m를 적용하여 16,57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 하였다.

54) 비탈면 안정을 위한 대책 공법이란 활동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이나 이미 활동이 진행된 비탈면의 재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대응 방안을 말한다.

[표 5] 비탈면 보강공법(Soil Nailing)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공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길이 (m)	수량 (m³)	사업비	길이 (m)	수량 (m³)	사업비	길이 (m)	수량 (m³)	사업비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Soil Nailing	10	100	217,751	8	100	201,181	△2	-	△16,570

2. 축중기 설치 미이행

「도로법」 제77조,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및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제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차량제한을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이용하는 사토·순성토 또는 건설폐기물 중 어느 하나의 운반량이 10,000m³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m³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축중기는 덤프트럭이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토공 및 건설폐기물의 이동량이 10,000m³로 이상임에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 덤프트럭이 토석 등을 적재하여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측정하여야 했는데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축중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① “■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 규정 및 현장여건과 상이하게 과다 계상된 비탈면 보호공(녹생토, 줄떼) 및 비탈면 보강공법 Soil Nailing 등 92,701천 원(제경비 포함)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비탈면 보호공(녹생토)이 과다 계상된 26,753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 119,454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축중기를 설치하여 과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8]

강 원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관 련 자 원주시 ●●면(전 ◇과) 지방◆◆ CR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하수관거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장 효율성 증대를 위해 [표 1]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CR은 2016. 7. 18.부터 2019. 1. 13.까지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1]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현황

(단위 : 천 원)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개요	공사(용역)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원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2015.02.16.~ 2015.12.15.	191,680	(주)○○	CS
원주시(□□, □□)하수관로 정비공사(토목,기계)	하수관로 L=13.778km	2017.02.20.~ 2019.11.05.	5,314,600	(합)☆☆	CT
원주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017.02.20.~ 2019.11.19.	1,173,500	(주)□□	CU
□□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2017.02.01.~ 2018.10.12.	193,108	★★(주)	CV
□□면 마을하수도 설치공사(토목,건축,기계)	처리장 Q=230톤/일, L=16.85km	2018.10.12.~ 2021.02.19.	4,719,859	(주)××	CW
원주(○△, ◇, □□ 및 ○○)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018.10.23.~ 2021.05.13.	1,502,500	(주)●●	CX

※ 원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사감독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에는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원주시(□□, ■■■)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미설치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 90,600천 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정산 조치를 하지 않았고,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Open cut 공법으로도 가능한 구간을 관로 추진공을 반영하여 39,21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총 129,81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가. 조립식 간이 흙막이 정산 미조치

하수관로 설치공사 추진 시 관로 터파기에 따른 지하수의 영향과 사면 붕괴 등을 방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조립식 가설 흙막이⁵⁵⁾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

“원주(□□, ▨▨) 하수관로정비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제6장 3.7 굴착공법 계획에 의하면 지장물이 없고, 굴착이 용이한 구간으로 굴착심도가 2.0m이하인 구간은 경제성과 시공성을 감안하여 Open cut를 적용하였고, 지하수의 영향과 굴착심도가 2.0m이상인 구간에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주시(◇과)에서는 “원주시(□□, ▨▨) 하수관로 정비공사”을 추진하면서 굴착심도가 2.0m 이상인 전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조립식 가설 흙막이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터파기 시 지하 매설물 간섭 등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하여 미설치한 조립식 간이 흙막이 L=512.8m, 90,60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을 통한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관로 추진공 과다 설계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1) 1.3.5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에 의하면 하수도시설은 유지관리상의 조건, 시공상의 조건 및 건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하수를 배제시키기 위한 계획에서 방류하천이나 해역의 계획외수위가 극히 중요하며, 방류수역의 계획외수위는 하천의 경우 해당 하천의 계획홍수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2.16.3 하수관거 개·보수 계획에 의하면 관거의 굴착 및 비굴착에 대한 경제성 비교는 단순한 직접공사비 비교를 지양하고 도로를 굴착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간접비용까지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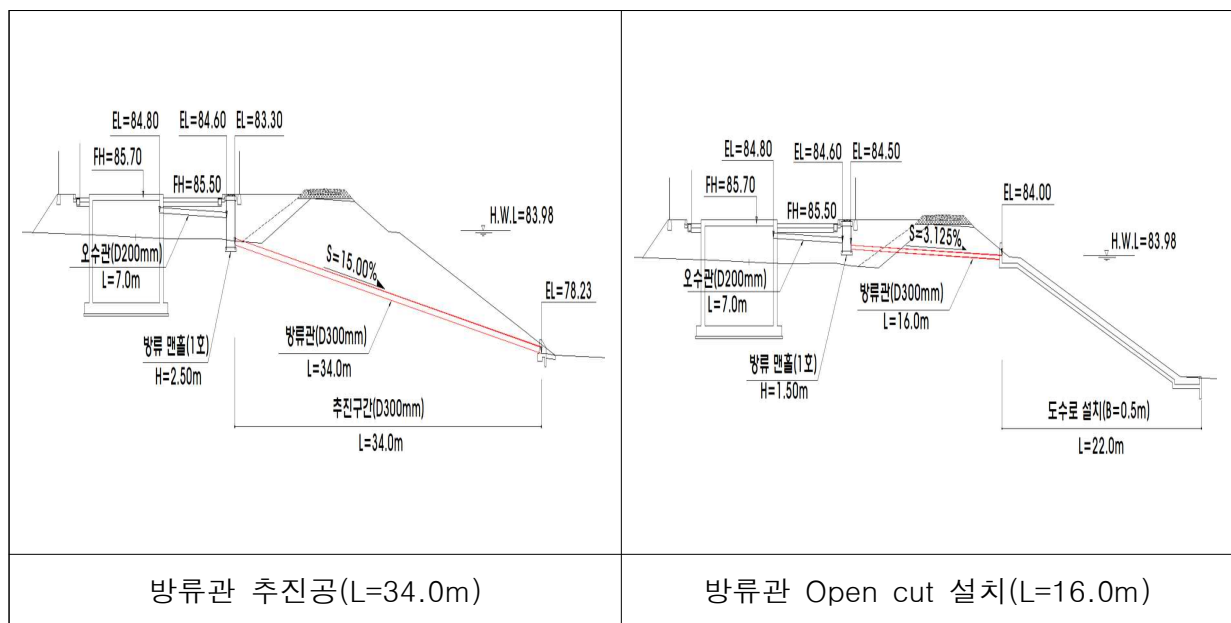
55) 조립식 가설 흙막이 : 지반을 굴착할 때 주위의 지반이 침하나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드는 토압·수압에 저항하는 벽체와 그 지보공의 총칭(통상은 조립식 가설 구조물)

또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 지침」(환경부, 2014. 1월)에 따르면 비굴착공법 적용구간은 지하지장물(암거 등) 하부통과, 하천 횡단관거 구간,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굴착심도가 깊은 지역이나 개착공법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실시설계서에 비굴착공법 적용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 관로 추진공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장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하수를 배제시키기 위해 방류수역의 계획외수위(하천의 경우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배수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그림]과 같이 “☒☒면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최종 배수관로를 하천의 홍수위 이하로 계획하였고, Open cut 방식으로 하수관로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 관로 추진공(L=34m)을 적용하여 39,21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림] 배수공 단면도 비교



2. 건설사업관리 방식 검토 절차 미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⁵⁶⁾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 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⁵⁷⁾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추진을 위해서는 ①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②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③ 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른 총 소요인력 산정, ④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⑤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원주시(□□,▨▨)하수관로 정비공사”와 “☒☒면 ○○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와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6) ①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 ①,②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7)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① 사업별 사업관리방식은 제6조의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각 사업에 대하여 적합한 사업관리방식을 배정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65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3.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구축 용역 분리발주 미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 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9호)에 따르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서비스(분류번호81151699)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수관로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구축용역을 공사 도급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자 등 관련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원주시(☐☐, ☐☐☐)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을 별도 분리발주 하지 않고, 도급공사(170,465천 원, 제경비 포함)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용역 면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자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원주시(田田, 田田)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가 불필요한 사업비 90,600천 원(제경비 포함)과 “田田면 田田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과다 계상된 관로 추진공 39,210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 129,81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시에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 등 발주청의 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 선정을 위하여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를 실시한 후 용역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인 GIS(지하매설물 공간정보) DB 구축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급공사와 분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9]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원(#관)

관 련 자 원주시 △과(전 #관)

지방☺☺

CY

내 용

원주시(#관)에서는 공원 속의 도서관으로 지역주민이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그림책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여 ‘젊고 건강한 혁신도시 원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혁신도시 내 지역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서문화 활성화 및 교육·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개요]

- 위 치 : 원주시 ○○동 ××××
- 사 업 량 : 부지면적 30,315㎡, 연면적 2,963㎡(지하1층/지상2층)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 사 업 비 : 15,400백만 원(국 2,400, 도 1,080, 시 11,920)

지방☺☺ CY은 2018. 4. 11.부터 2019. 1. 13.까지 #관 ▽▽담당으로서 도서관 건립업무 및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기준 부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

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의 예상 연면적합계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관)에서는 2018. 5. 21.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보면 유사용역 실적을 교육연구시설(도서관)이 아닌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축 건축’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11개 업체 중 9개의 업체가 평가점수 100점을 취득하여 설계용역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변별력을 상실케 하였고 결국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축공사 감리용역 발주 부적정

「건축법」 제25조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준다중이용건축물⁵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관)에서는 2019. 1. 11. ‘♯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계약 의뢰하면서 교육연구시설인 도서관은 상주감리 대상임에도 과업지시서나 용역대

58)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7의2호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교육연구시설

가를 비상주 감리로 작성하였고, 2019. 2. 19. ◇◇군 소재 □□ 건축사사무소 (주) 대표 CZ와 76,38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감리용역사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2차례(2019. 2. 28./2019. 4. 15.)에 걸쳐 “해당 감리용역 건축물은 상주감리용역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대가 재산정에 따른 감리계약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관)에서는 감리용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타절)하고 재입찰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⁵⁹⁾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계약해지에 따른 절차 이행 후 재입찰하여 공사감리를 계약 및 착수하기까지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지연과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건축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합하게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상주 감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게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9) 문서 : ◇ 도서관-4387(2019.5.30.)호 “#관 건립사업 건축 감리용역 문제점 및 대책보고”

[일련번호: 20]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노인복지관 ㉮㉮ 분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관 련 자 ① 원주시 *과(전 ㉮과) 지방★★ AE

② 원주시 ㉮과(전 ㉮과) 지방◆◆ DA

③ 원주시 ㉮과 지방㉮㉮ DB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읍 지역에 “노인복지관 ㉮㉮ 분관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개요]

- 위 치 : 원주시 ㉮㉮읍 ×××-×외 1
- 사 업 량 : 부지면적 611.36㎡, 연면적 728.94㎡(지상2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사 업 비 : 2,481백만 원(시비)

[조감도]



지방★★ AE는 2017. 1. 9.부터 2018. 7. 4.까지 ○과 □□담당으로 노인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 DA은 2017. 10. 10.부터 2018. 9. 8.까지 ○과 □□팀 실무 담당자로서 노인시설 관련 신축 및 기능보강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지방●● DB는 2017. 1. 9.부터 현재까지 ●과 ◆◆팀에서 용역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 2인 전적,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수의 1인 전적에 의해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건축설계용역 등 기술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2017. 10. 25. “노인복지관 ㉮㉮ 분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관

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71,733천 원으로 산정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하였고,

연접부지에 위치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가 설계공모를 통해 (주)○○○건축사사무소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해당 건물에 연접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서로 연접하고 있어 특정한 위치, 성능, 효율 등을 감안해 일체감 있는 설계를 위하여 기 설계용역업체와 수의계약 함이 타당하다는 수의계약 사유서⁶⁰⁾를 제출하였다.

또한 예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추정금액으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2017. 11. 16. (주)○○○건축사사무소와 수의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타 업체의 동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실시설계용역 추진 현황

용역명	계약금액 (천 원)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신축공사	393,984	2017.06.15.~2017.12.15.	서울	(주)○○○건축사사무소	DC	설계 공모
노인복지관 ㉮㉮ 분관 건립공사	63,900	2017.11.16.~2018.06.01.	서울	(주)○○○건축사사무소	DC	수의 계약

2. 건축공사 통합 발주 검토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선 공사의 필요

6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에정지의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당초 ‘노인복지관 ㉮㉮ 분관 신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친환경구역 통합관리센터와 노인복지관이 서로 연결하고 있어 특정한 위치, 성능, 효율 등을 감안하여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위하여 기 설계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설계를 추진하였고 연결 통로를 통해 강당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구조물공사’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완료된 이후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표 2]와 같이 건축공사를 각각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 건축공사 추진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 원)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비고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친환경구역 통합관리센터 건축공사	4,005	2018.04.10.~2019.06.20.	원주	㉮㉮(주)	DD	
노인복지관 ㉮㉮ 분관 건축공사	1,298	2018.06.18.~2019.07.25.	춘천	(주)㉮ ㉮	DE	

이에 따라 ‘친환경구역 통합관리센터’보다 2개월 늦게 ‘노인복지관 ㉮㉮ 분관’ 건축공사를 착수하였고, 파일공사를 하면서 연결한 친환경구역 통합관리센터가 이미 공사 진행 중에 있어 당초 설계된 PHC 파일⁶¹⁾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대형장비 진입 및 시공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2018. 9. 5. 설

61) PHC 파일 규격은 D400이며 대형장비(항타기) 사용

계변경을 통해 소구경말뚝 공법 중 HELIX 파일⁶²⁾로 변경 검토하여 약52,376천 원(제경비포함)의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용역 발주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부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2) HELIX 파일 규격은 $\phi 114.3 \times 9T$ 이며, 강관에 나선형 날개(Helix)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파일드라이버를 이용 직접 회전·압입

[일련번호: 21]

강 원 도 시정 요구

제 목 서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원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원주시(\$과)에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을 통해 공공복리를 향상하고자 서부순환 도로개설사업을 [표 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

[표 1] 서부순환 도로개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 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대표)
서부순환도로 (▣▣-◎◎간) 개설공사	L=3.20km IB=20~30m) (터널 430m)	34,574	2016.04.19.	2016.04.20.~ 2021.09.15.	주▣▣ (DF)
서부순환도로 (▣▣-◎◎간)터널 전기공사	L=3.20km IB=20~30m) (터널 320m)	464	2018.09.28.	2018.09.28.~ 2020.09.30.	●●(주) (DG)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

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시행 □□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서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비 36,806천 원(제경비 포함), 전력케이블(2,621m) 설치비 23,933천 원(제경비 포함)등 총 60,739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이 과다 계상되어 있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함에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서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 품질시험비 과다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⁶³⁾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도로개설사업 시공구간에 대해 현장여건에 적절하게 현장밀도시험 및 평판재하시험을 계획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어야

63) 평판재하시험 : 도로공사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3층 포설후 150미터마다 반영

함에도 전구간에 대하여 평판재하시험 228회 시행하는 것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였고 현장여건에 비해 과다하게 설계 반영된 현장밀도시험을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을 조치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36,806천 원 (제경비 포함) 상당의 품질시험비를 과다 계상하였다

[표 2] 품질시험비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공 종	단위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계	회	423	130,807	228	94,001	△195	△36,806
평판재하		128		168		40	
들밀도시험		295		60		△235	

2. 서부순환도로(☐☐-◎◎)개설 전기공사 케이블 설치비 과다계상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터널연장은 총760m(시청방향 420m, 기업도시방향 320m)로 현재 설계에 반영된 터널 조명설비 전력케이블 설치 물량은 총 25,116m이나, 현지 확인결과 현재 시공 중인 터널연장에 적정한 터널 조명설치 전력케이블 수량은 22,495m가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원주시(\$과)에서는 기업도시방향 터널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표 3] 과 같이 과다하게 설계 반영된 전력케이블 2,621m에 대한 설치비 23,933천 원 (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한 채로 2019. 6. 28.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표 3] 터널조명 설치비(기업도시방향) 조정 내역

(단위 : m, 천 원)

공 정	품 명	당초(현재내역)<A>		변경(조정내역)		증/△감<B-A>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수량	사업비 (제경비포함)
합 계		13,587	133,374	10,966	109,441	△2,621	△23,933
터널조명 설 치	전력케이블 (F-CV1C,16mm²)	8,736	96,462	6,921	77,421	△1,815	△19,041
	전력케이블 (FR-8 1C,6mm²)	4,851	36,912	4,045	32,020	△806	△4,892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시정] 서부순환도로(▣▣-◎◎간) 개설사업 품질시험비 36,806천 원(제경비 포함)과 전력케이블(2,621m) 설치비 23,933천 원(제경비 포함) 등 총 60,739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2]

강 원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징계자 경력평정 오류 및 소방위 이하 전문능력 평정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소방서

관 계 부 서 ♣ 과

관 련 자 ① 양양소방서 ☆과 과장(전 원주소방서) 지방소방○ DH

② 원주소방서 ♣ 과 지방소방◇ DI

내 용

원주소방서(♣ 과)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근무성적평정, 경력 평정 등), 복무관리, 징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소방○ DH은 2018. 1. 4.부터 2019. 6. 30.까지 원주소방서에서 ◇◇담당 으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고, 지방소방◇ DI은 2017. 7. 10.부터 2019. 1. 6.까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전문능력평정 등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경력 평정 부적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 처분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경력평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지방소방정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소방서(♠ 과)에서는 2018년 하반기 승진임용 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경력평정을 하면서, 2018. 11. 8. 음주운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소방◎ DJ의 경력평정에, 승진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되는 감봉의 처분기간 1월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표 1]과 같이 부적정하게 평정하였다.

[표 1] 징계 처분자 경력평정 오류 현황

구분	징계 처분자	규정상 평정경력	오류평정경력	오차	비고
평정기간	지방소방◎ DJ	47월	48월	1월	
평 정 점		21.53점	22점	0.47점	

2. 전문능력 평정 부적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소방사 전문능력 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방법은 제1종대형운전면허 1.5점, 응급구조사 2급(또는 1급) 또는 간호사 1.5점을 부여하며, 위 자격증은 취득시점에 관계없이 자격증 보유여부로 평정하며,

소방사·지방소방사 중 제1종 대형운전면허 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소지자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 자격(면허)증을 채용요건으로 하여 경력경쟁 채용된 경우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1.5점으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와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에 제1항 제2호의 자격증 중 1개를 소방사·지방소방사 계급에서 취득한 경우 3점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위 계급의 전문능력 평정 대상 자격증과

평정점 및 평정 방법은 응급구조사 2급,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위험물기능사(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사),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2급),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은 각 자격증 별 1.5점,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사, 소방기술사, 인명구조사(1급),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은 각 자격증 별 3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위 계급에서 다음 각 호⁶⁴⁾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각주와 같이 평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전산능력, 언어능력, 자격증·학위취득(이하 “전산능력 등”이라 한다) 가점을 평정함에 있어 동일 또는 동종의 가점대상이 아닌 한 각각에 대하여 평정하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소방서(♠과)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해 2018년 전문능력 평정을 실시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인사기록 및 보유자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평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자격 확인 누락, 입력오류, 수식오류 등으로 [표 2]와 같이 총22명의 교육훈련성적을 오류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4) 가. 응급구조사 2급(또는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및 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또는 자동차정비기능장), 화재대응능력평가(1급), 인명구조사(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3개는 1.5점, 4개는 2점, 5개는 2.5점, 6개는 3점
나. 응급구조사 1급(또는 간호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위험물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인명구조사(1급),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사, 소방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중 2개는 2점, 3개는 2.5점, 4개는 3점

[표 2] 소방공무원 전문능력평정 가점 오류 평정자 현황

연번	평정기간	계급	성명	평정 현황				비고 (사유)
				평정자격	규정상 평정점	입력 평정점	오차	
1	'18 상반기	소방*	***	-	0	2.5	2.5	수식오류
2	"	"	***	소방(기),소방(전) 화재조사,컴활(2)	3	1.5	-1.5	수식오류
3	"	소방*	***	컴활(2),소방(기)	3	0	-3	수식오류
4	"	"	***	-	0	1.5	1.5	수식오류
5	"	소방*	***	컴활(2)	0	1.5	1.5	수식오류
6	"	"	***	컴활(2)	0	1.5	1.5	수식오류
7	"	"	***	-	0	1.5	1.5	수식오류
8	"	"	***	-	0	1.5	1.5	수식오류
9	"	"	***	응급(2)	1.5	0	-1.5	수식오류
10	"	"	***	화재(1)	1.5	0	-1.5	수식오류
11	"	"	***	-	0	3	3	수식오류
12	"	소방*	***	대형	1.5	0	-1.5	수식오류
13	"	"	***	응급(2), 대형	3	1.5	-1.5	수식오류
14	"	"	***	대형	1.5	0	-1.5	수식오류
15	"	"	***	대형	1.5	0	-1.5	수식오류
16	"	"	***	응급(2), 대형	3	0	-3	수식오류
17	'18 하반기	소방*	***	-	0	3	3	입력오류
18	"	소방*	***	위기	1.5	0	-1.5	자격가점 → 전문능력
19	"	소방*	***	대형	0	1.5	1.5	입력오류
20	"	"	***	대형	0	1.5	1.5	입력오류
21	"	소방*	***	대형	1.5	0	-1.5	입력오류
22	"	"	***	대형	1.5	0	-1.5	입력오류

※ 원주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원주소방서장은

[훈계] ① 징계자에 대한 관련규정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정규정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3]

강 원 도

시정 요구·통보

제 목 현장활동 구조장비 운용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소방서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원주소방서(․과)에서는 구조·구급장비의 총괄 관리부서로 관할구역의 구조 구급 활동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화재진압장비·구조장비·구급장비·보호장비·정보통신장비·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하고,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운용”이란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내용연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장비가 필요한 시기를 확인 후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 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소방장비의 분류범위는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소방장비를 포괄하고, 기능이 같은 소방장비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분류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된 경우 불용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외근부서의 장은 소방장비를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호⁶⁵⁾에 정하는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고, 소방장비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19. 6. 21. 원주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운용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화재현장 및 재난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화상카메라의 경우 보유기준은 대별 2대인데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총 6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형유압엔진펌프의 경우 대별 보유기준은 1대인데 총 4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표]와 같이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구조장비가 22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구조대 등 구조장비 운영 현황

(단위: 점)

번호	용 도	장비명	내용 연수	보유 기준	구조대 보유량			명륜	학성	우산	단구	태장		신림
					계	양호	내용 연수 초과							
총계					202	139	63	9	15	40	8	18	26	10
1	보호장비	인명구조경보기	3	대원1	16	0	16					6	3	
2	일반구조용	E/V마스터키	6	대별2	4	2	2						1	
3		구조용 들것	5	대별1	5	5	0							
4		라이트라인	5	대별2	11	11	0	1	1	1		1	1	

65) 가. 소방장비의 운용 및 운행에 관한 사항, 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소방장비의 점검,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소방장비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마.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번호	용 도	장비명	내용 연수	보유 기준	구조대 보유량			명륜	학성	우산	단구	태장		신림
					계	양호	내용 연수 초과							
5		헤드랜턴	3	대원1	20	10	10			11				
6		휴대용탐조등	5	대별5	26	26	0	1	4	2	3	6		1
7	절단구조용	동력절단기	5	대별1	3	3	0						1	1
8		철선절단기	10	대별1	8	8	0		3	2	1		2	1
9		체인톱	3	대별2	5	1	4						2	1
10	중량물 작업용	대형유압엔진펌프	10	대별1	4	3	1						1	1
11		에어백	5	대별1	3	2	1							
12		유압램	10	대별1	3	2	1						1	1
13		유압전개기	10	대별1	3	2	1						1	1
14		유압절단기	10	대별1	4	3	1						1	1
15		지지대	10	대별1	5	4	1							
16	측정용	가스측정기	5	대별1	5	3	2	1				1	2	
17		개인선량계	10	대별5	19	8	11					2		
18	탐색용	매몰자 영상탐지기	6	대별1	2	1	1							
19		열화상카메라	6	대별2	8	7	1	4					3	
20	파괴용	도끼	5	대별5	27	24	3	2	7	5	4	2	3	2
21		문개방기구	5	대별2	4	3	1							
22	화생방작업용	화학보호복(레벨A)	5	대별10	17	11	6						4	

※ 원주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구조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원주소방서(♣ 과)에서는 구조대가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운용중인 장비를 관내 구조장비 미보유 안전센터에 관리 전환하여 안전센터에서 인근의 긴급한 구조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소방대원이 주기적인 구조장비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활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구조장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구조대에만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관리하는 등 현장활동 구조장비 운용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원주소방서장은

[시정] 빠른 기간 내 구조장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조장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과장)은

[통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가능한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장비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방장비의 구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4]

강 원 도

시정 요구·통보

제 목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및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원주소방서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원주소방서(♪ 과)에서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에 따라 관내 의용소방대 등 소방보조조직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여비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훈련에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주소방서(♪ 과)에서는 매월 정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등으로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할 119안전센터장은 매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장은 교육훈련 기록부와 교육훈련 여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사실을 확인 한 후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고, 소집수당의 경우 소방활동 보조임무를 수행 후 소방활동기록부에 참석자가 서명하고 의용소방대장이 확인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소방서(♂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의용소방대장 DK이 원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 문화탐방(2018. 11. 21. ~ 11. 23.)에 참가하였으므로 정기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참석 여비 1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별첨 1]과 같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2018. 5. 17.)에 참가한 ◆◆남성의용소방대(5명)와 여성의용소방대(23명) 총 28명에 대하여 원주시에서 실비보상금을 각 20,000원씩 지급하였음에도 원주소방서에서 여비를 중복하여 각 10,000원씩 총 28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90,000원의 의용소방대 관련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1]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여비 중복지급 현황

연번	의용소방대명 (직위)	성명	정기교육일	여비지급	비고 (의용소방대 문화탐방기간)
1	◆◆의용소방대(대장)	DK	2018.11.22. 15:00~17:00	10,000원	2018.11.21.~ 11.23.

2.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부적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⁶⁶⁾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고,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소집수당)에 의하면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와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소

66) 가.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나.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 라.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집수당 신청서)과 별지 제11호 서식(소방출동기록부)을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강원도 소방본부 ㉠과-25216(2018.12.19.)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강화 등 투명성 확보 추진대책 알림”에 따르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 구조·구급 등 업무 시 소방출동(활동)기록부를 활동 종료 시 현장에서 실명 작성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시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원주소방서(㉠과)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 할 때는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화재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확인하여 소방출동(활동)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증빙에 따라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만큼의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주소방서(㉠과)에서는 [별첨 2]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5월 까지 재난(화재)현장에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 2019. 1. 2. 13:00 원주시 ★★ 시장 화재 등 총 35회의 화재현장에 출동한 529명의 대원에게 소집수당을 지급 하면서 의용소방대에서 제출한 소방출동기록부에 현장 도착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집명령 발령부터 귀소한 시간만 기재되어 개인별 활동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개인별 활동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게 화재진압 업무시간(소집명령 문자발송시간 ~ 귀소시간) 동안 소방출동기록부에 서명한 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소집수당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3.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기준 상이

원주소방서에 대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중 2018년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동절기 대기근무에 따른 각 소방서별 지원 경비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표 2]와 같이 도내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방기술경연대회 여비와 급식비,

동절기 대기근무에 따른 수당과 급식비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여비, 급식비, 수당 등의 지원에 있어서 통일된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2] 2018년도 의용소방대 관련 경비지원 현황

연번	관 할 소방서	소방기술경연대회		동절기 대기근무			비고
		여비 지급	급식비 지급	소집수당 (지급시간)	급식비 지급	간식비 지급	
1	‘ㄱ’	0			0		
2	‘ㄴ’				0		
3	‘ㄷ’	0		2			
4	‘ㄹ’		0		0		
5	‘ㅁ’			1	0		
6	‘ㅂ’	0			0		
7	‘ㅅ’	0		1	0	0	
8	‘ㅇ’		0		0	0	
9	‘ㅈ’				0	0	
10	‘ㅊ’		0	2	0		
11	‘ㅋ’	0			0		
12	‘ㅌ’	0		2		0	
13	‘ㅍ’	0			0		
14	‘ㅎ’				0	0	
15	‘ㄱㄴ’	0		3		0	
16	‘ㄱㄷ’	0			0	0	

조치할 사항 원주소방서장은

[시정] 의용소방대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여비 29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장(♂ 과장)은

[통보] ①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관련 소방출동기록표에 개인별 활동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② 각 소방서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여비 등에 대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시어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